

2010년도 한국공공행정학회 춘계 산학연공동학술세미나

충청남도 민선5기의 정책전망과 과제

- ◆ 일시: 2010년 4월 30일(금) 14:00 ~
- ◆ 장소: 선문대학교 대회의실
- ◆ 주최: 한국공공행정학회, 충남발전연구원
- ◆ 주관: 선문대 행정학과, 정부간관계연구소,
한서대 내포지역발전연구소
- ◆ 후원: 충청남도, 중도일보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20	20'	· 개 회 및 인 사 말 씀	심문보 학회장 김봉태 선문대총장
14:20	16:00	100'	· 제 1 섹 션 진 행	제1주제 제2주제
16:00	16:20	20'	· 휴 식	
16:20	17:00	100'	· 제 2 섹 션 진 행	제3주제 제4주제
17:00	17:30	30'	· 종 합 토 론	
17:30			· 폐 회	

목 차

진행사회 : 최한규 박사 (한국공공행정학회 부회장)

제 1 섹션

- 좌 장 : 이승중 (서울대학교 교수)
- 제1주제 : 충청남도 민선5기의 과제와 전망
-발표자 : 배정환 (한서대학교 교수)
- 제2주제 : 충남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자 : 김난영 (선문대학교 교수)
- ◆ 토론자 : 윤석환 (청양대학 교수)
고경호 (대전일보 충남본부장)
차경은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원)
이준건 (배재대학교 교수)

제 2 섹션

- 좌 장 : 백종섭 (대전대학교 교수)
- 제3주제 : 충남의 도농간 지역균형발전 방안
-발표자 : 윤준상 (공주대학교 교수)
- 제4주제 : 충남지역의 녹색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
-발표자 : 권경득(선문대)·임정빈(성결대)·김덕준(정부간관계연구소)
- ◆ 토론자 : 신기원 (신성대학 교수)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남 (중도일보 주필)
조병무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종합토론

- ◆ 토론자 : 이승중 (서울대학교 교수)
오열근 (단국대학교 교수)
권경득 (선문대학교 교수)
심문보 (한서대학교 교수)

제 1 주 제

충청남도 민선5기의 과제와 전망

배 정 환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충청남도 민선5기의 과제와 전망

배 정 환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I. 서론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재개된 이후 20여년이 흘렀다. 그간 1기 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네 차례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경험을 축적해왔다.

지난 90년대와 2000년대 초 지방자치에 대한 주요한 논의 중 하나가 일친한 경험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역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참여의 문제가 존재해왔다.

그리고 민선 4기를 맞이하여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 실제화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기대를 받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는 5천만 인구규모, 세계 10위권의 경제, 그리고 세계 30위 수준의 삶의 질적 수준을 고려할 때 실질적 자치의 실현과 지방의 특성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6월 또 한번의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5기 민선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주민들의 삶에 대한 요구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4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민선 4기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좋은 정책들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민선5기 출범을 위한 지방선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세종시 수정의 문제, 천안함 침몰에 의한 추도분위기 속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물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의 부재 등이 나타나면서 주민 1인이 8표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각 지역의 현안과제들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민선 5기의 순조로운 출범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지방정책의 참여 등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충남의 민선4기 기간동안 충남지역의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에 대한 거시 지표들을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민선5기에서 해결되어야 할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충남의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충남지역의 현안과제를 살펴보고 위해서 충남지역뿐 아니라 16개 시도의 거시경제지표 및 주민 삶과 관련된 지표¹⁾를 통하여 충남도의 역점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1) 거시지표는 통계청 및 충청남도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지표자료를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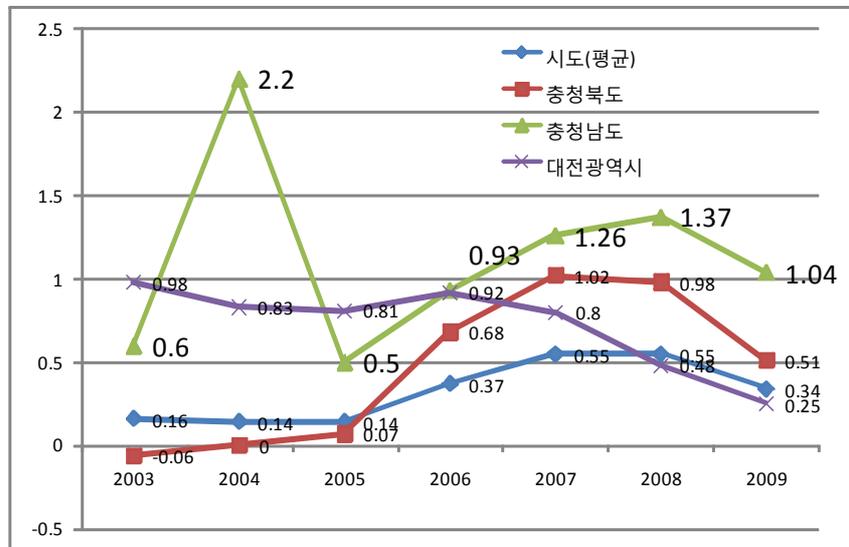
시사점 도출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 그리고 전망을 차례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거시지표를 통한 민선4기 성과와 과제

1. 인구 및 생활지표 부문

충남의 최근 인구 증가율은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총인구수는 2,039,24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인구 증가율은 2009년 시도평균 0.34%보다 높은 1.04%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증가율은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준이다.

<그림 1> 충남의 인구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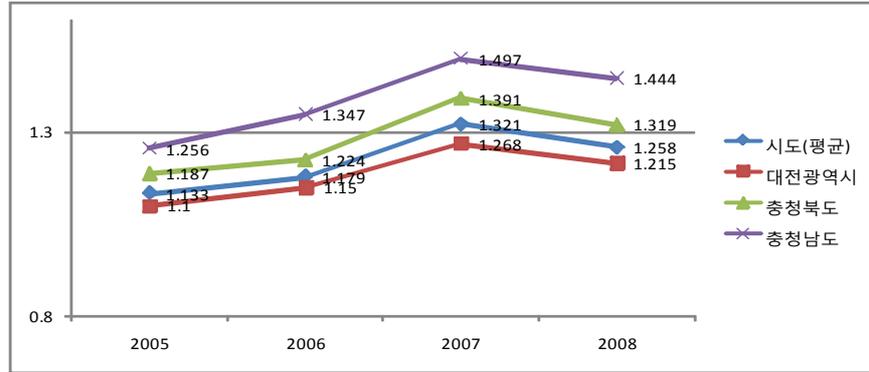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충남의 인구증가는 경제성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444명으로 인구 증가의 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외국인의 증가도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는 충남이 9.06명에서 2008년 17.47명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충남의 국제화 수준의 향상 및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남지역의 일반재정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말 약 4조원에 달하는 세입과 3조6천억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2009년 현재 72.4%로 전국평균인 75.9%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충남의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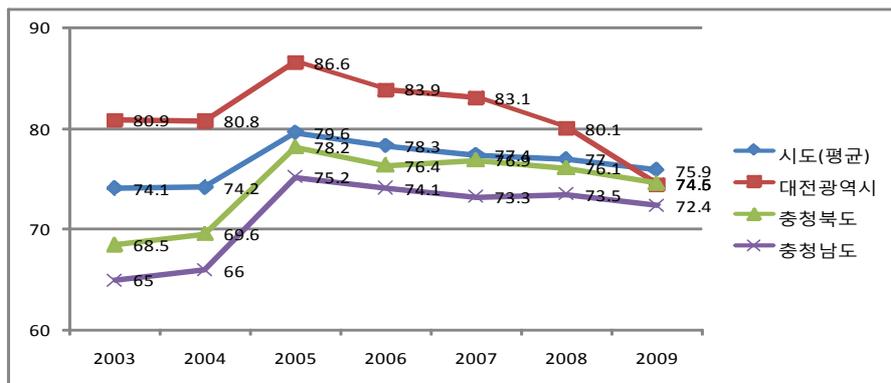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1> 충남의 세입 및 세출결산 추이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입결산	3,148,019	3,222,720	3,337,732	3,582,474	3,914,089
세출결산	2,510,267	2,783,270	2,834,021	3,108,717	3,662,842

자료 : 충남도 지방재정공시 2009.

<그림 3> 충남의 재정자주도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충남의 지방채무의 경우 민선4기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방재정의 악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충남도 실질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청의 이전, 사회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충남의 문화생활 및 체육여건 지표는 문화시설과 도시공원조성면적, 체육시설수 등을 검토하였으나 문화시설의 통계자료가 2007년으로 제한되어 본 연구에서는 2008년까지의 자료가 있는 인구천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과 인구십만명당 체육시설수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표 2> 충남의 지방채무 현황

구 분	채무현황	실질채무	인구수 (내국인)	1인당채무액 (천원)
연 도 별	2004	508,304	1,953,406	64
	2005	519,752	1,962,646	49
	2006	601,179	1,974,433	45
	2007	635,859	1,995,531	53
	2008	711,189	133,680	2,018,537

자료 : 충남도 지방재정공시 2009.

인구십만명당 체육시설수는 2008년 기준으로 충남도가 97.35개로 전국 평균인 104.05개보다 약 7개 정도 모자라는 수치를 보였으며 인근 충청북도 102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조성 면적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충남의 도시공원 면적은 27.43km²로 전국 평균 30.01km²보다 적었으며 또한 인근 충북 48.81km², 대전 34.88km²보다도 떨어지고 있었다.

2. 경제활동 지표부문

충남의 경제활동 지표부문은 우선 경제활동에 따른 지역내총생산(GRDP)과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고용률, 실업률, 주택가격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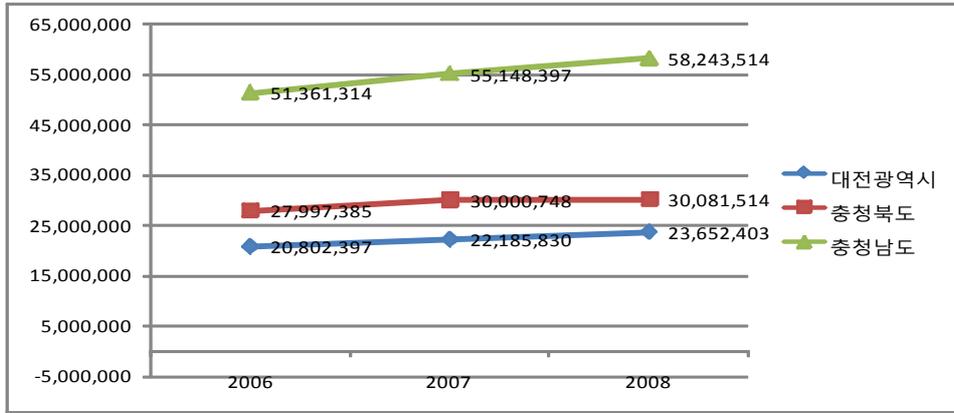
경제활동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각 시도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경제권 차원의 선도산업육성과 광역자치단체별 전략산업육성과 맞물려 있으며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자유치와 기업유치 실적은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각 시도의 주요한 정책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경제활동에 관련된 지표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시사점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충남, 충북, 대전의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2006년 이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GRDP 상승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남에서 발표한 외자유치 누계 5,168억불 및 기업유치 2,918개 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충남도정운영성과, 2009). 또한 천안 및 아산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털벨리의 LCD 등의 수출호조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속도와 함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시도 평균 21.97백만원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하면 두 번째 높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4>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의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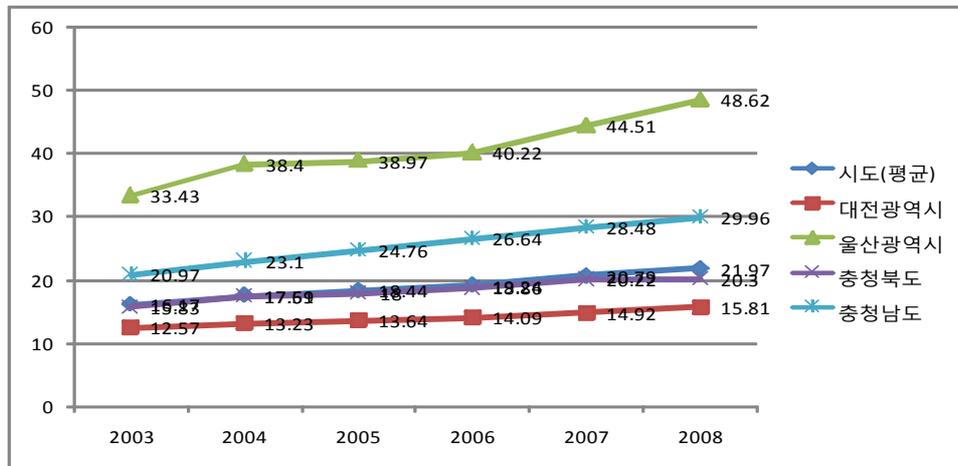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탈, 당해년가격.

<그림 4> 충남 및 기타시도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단위 : 백만원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탈.

충남의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관된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58.6%와 비교하여 충남은 60.5%로 2%정도 높은 수치이며 충북 59.4%, 대전 57.3% 등과도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의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3%로 충북 2.1%보다는 높았고 경북 2.7%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실업률의 차이는 지역간의 격차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충남의 산업발전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도 연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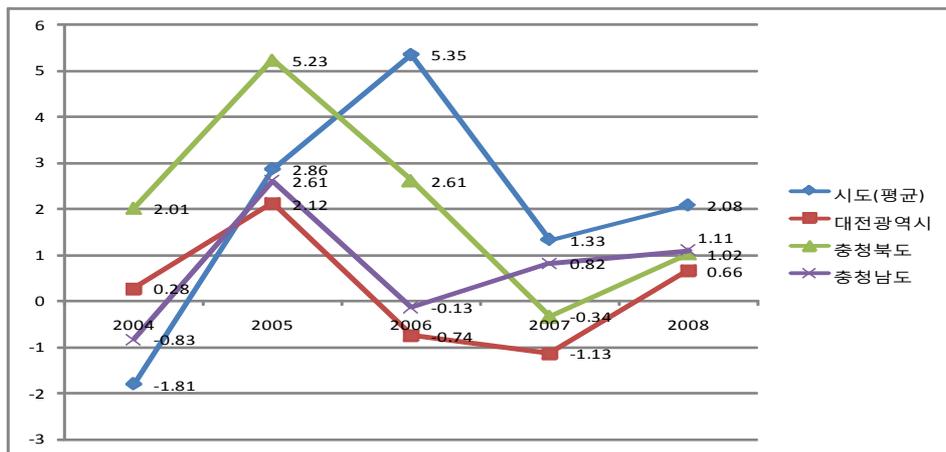
<표 3> 시도별 고용률 추이

시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평균)	59.3	59.8	59.7	59.7	59.8	59.5	58.6
서울특별시	59.2	60.1	60.3	60.1	60.3	59.6	58.1
부산광역시	55.2	55.5	55.7	55.9	55.9	55.1	54.1
대구광역시	57.7	58.7	58.4	57.8	57.2	56.5	56.4
인천광역시	59.1	59.1	58.7	59.1	59.5	59	59
광주광역시	54.9	55.5	56	55.5	56.5	56.3	56.4
대전광역시	57.4	57.2	56	56.3	56.9	57.7	57.3
울산광역시	58.8	59.3	58.6	57.6	58.9	59.5	57.9
경기도	59.7	60.4	60.2	60.3	60.1	60.2	58.9
강원도	57.2	57.8	57.5	58.2	57.7	57.7	57.8
충청북도	57.5	58.3	58.1	58.1	58.5	59.2	59.4
충청남도	61.9	63.1	62.7	63.8	64.5	62.2	60.5
전라북도	57.4	56.9	57.3	58	59	58.7	58.2
전라남도	63.7	63.1	63.6	63.4	63.6	63.5	63.8
경상북도	63.6	63.8	63.7	63.5	62.9	62.7	62.1
경상남도	60.9	61.4	60.5	60.3	60.5	60.9	59.6
제주도	69.2	68	68.3	68.5	67.7	67.6	66.7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충남의 경제발전 정도가 타 시도에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주택가격의 상승과 소비자 물가상승일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택가격과 소비자 물가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충남의 주택가격 상승률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먼저 주택가격상승률을 살펴보면 2008년 전국 평균 2.08%와 비교하여 충남은 1.11%로 비교적 안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주택가격안정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주택

수요의 감소로 나타난 아파트 미분양물량의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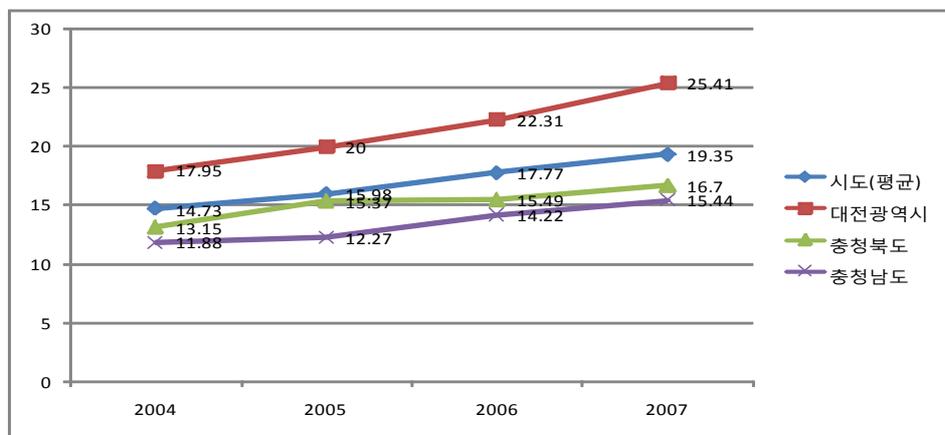
또한 경제활동의 증가는 소비자물가에 대한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2008년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은 4.91%였으나 충남은 4.95%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인근 충북은 5.14%, 대전은 4.66%로 나타나 충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충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소비자 물가에 대한 충남도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3. 주민복지 지표부문

민선4기 동안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주민복지 지표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중 복지예산비중,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충남의 일반회계중 복지예산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15.44%로 전국 16개 시도중 13번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인 19.35%에 비해 4%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의 25.41%와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근의 충북과 비교해도 낮은 비중이었다.

<그림 6> 충남의 일반회계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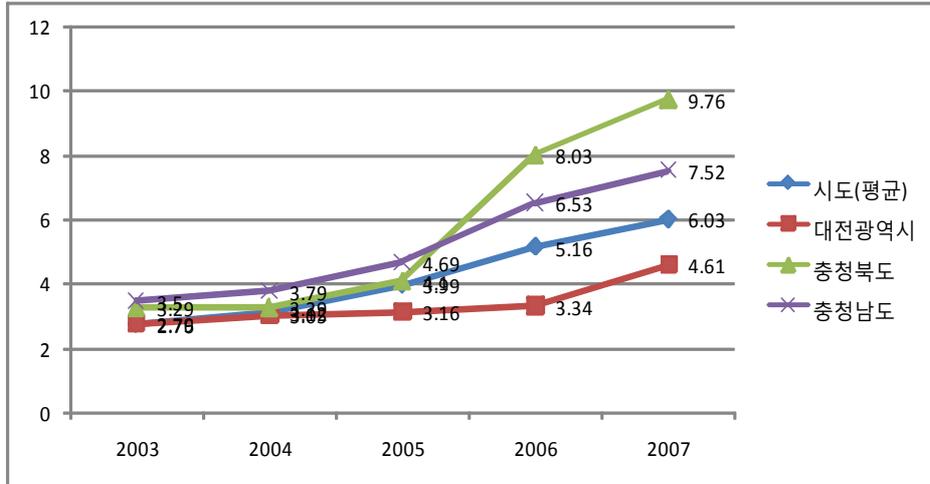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두 번째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는 충남의 경우 7.52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03개소 보다는 높았지만 인근 충북이 9.76개소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육아 문제 및 출산과 관련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의 육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아 보육시설수를 살펴보면 인구 천명당 12.77개소로 전국 평균인 13.19개소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 충청남도 민선5기의 과제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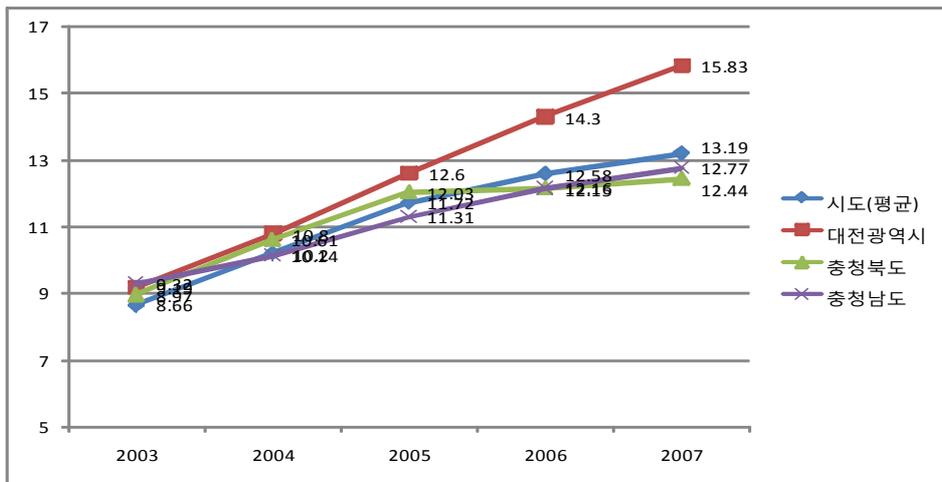
<그림 7>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이는 충남의 합계출산률이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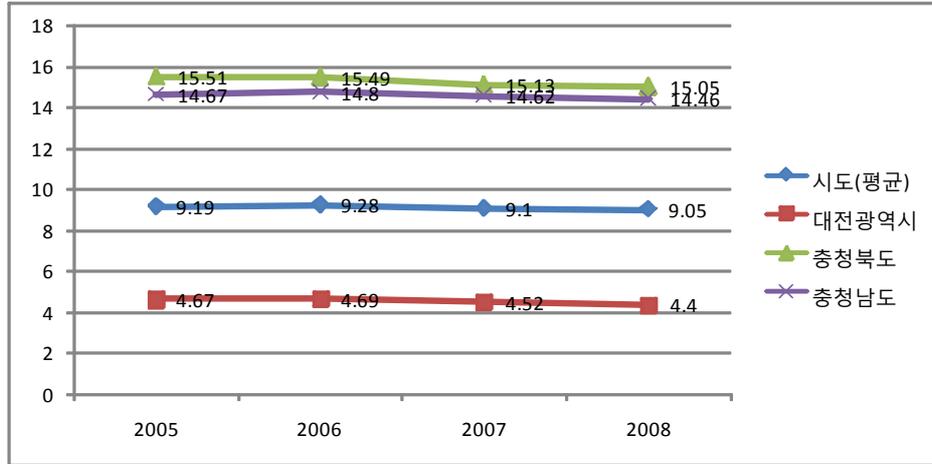
<그림 8> 유아(0-4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충남의 노령인구비율이 14.78%(2008)로 전국 11.5%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60세 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2008년 기준 14.46개소로 전국 평균인 9.05개소 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근의 충북 15.05개소보다는 적지만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수의 추이를 보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개선이 향후 과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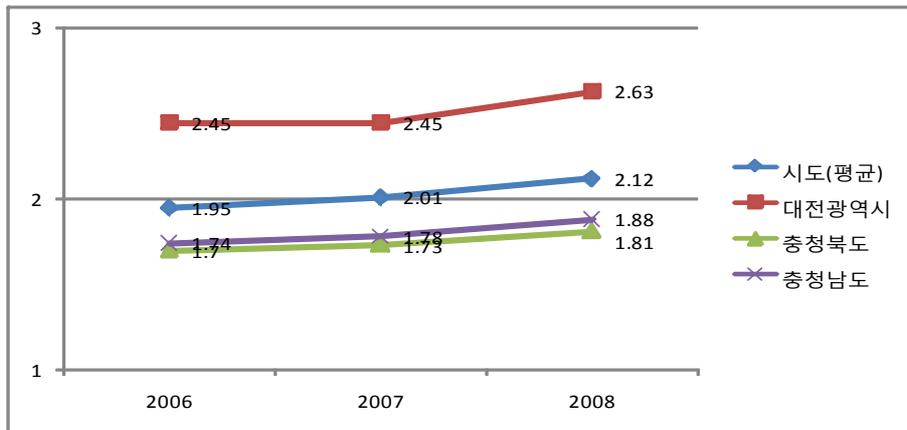
<그림 9>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의료복지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기 위한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전국의 평균은 2.63명으로 나타났고 충남은 1.8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인천 1.76명, 울산 1.75명보다 높지만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군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 개선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10>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Ⅲ. 민선5기 출범과 충남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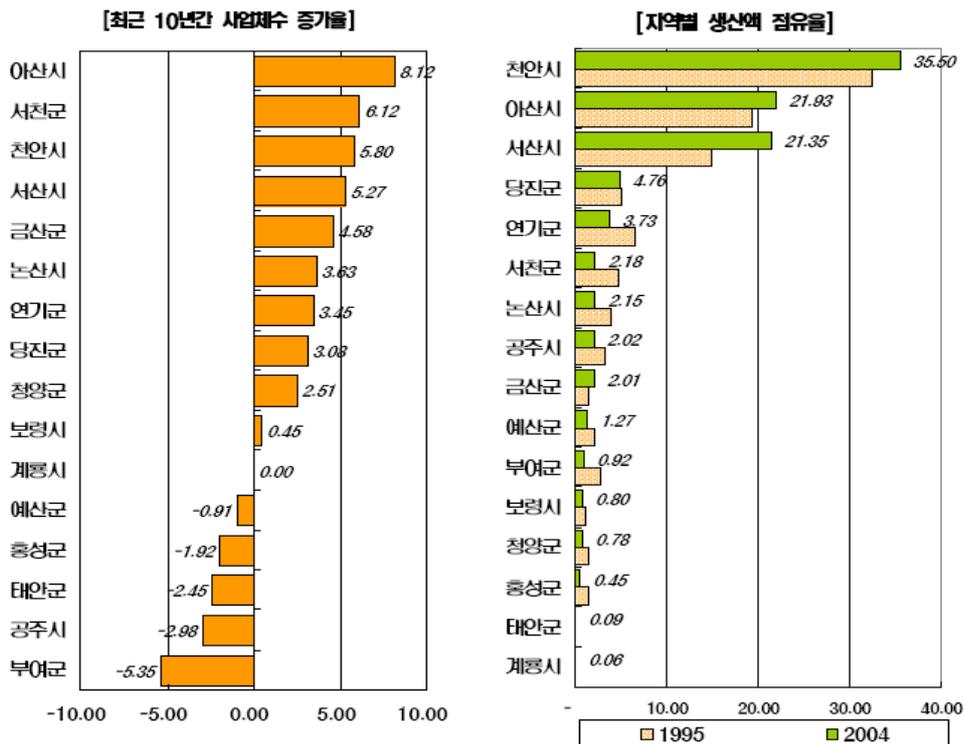
1.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과제

충남은 2004년 수립된 「충청남도 제2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농축산바이오, 첨단문화 등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완제품의 조립 및 생산은 지역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재·부품·장비 등의 제조업체가 해외 또는 수도권지역 등에 분포되어 집적의 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일정부분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체의 규모나 재정규모가 취약하고 농축산 바이오의 경우 농업테크노파크,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등 거점을 통해 기술보급 및 사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차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문화산업은 천안·아산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산업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충남의 산업은 산업간 연계의 미흡, 그리고 특정지역의 집적화에 의한 균형적 발전의 미흡, 도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어 민선5기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의 내실화 및 지역간 격차의 완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1> 지역별 사업체수 증가율 및 생산액 점유율 변화



자료 :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두 번째로 충남의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과제는 지역인재의 유치 및 정주기반을 확보하는 과제이다. 현재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의 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의 유출이 기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충남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는 일반 인력의 유입과 출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산업발전이 첨단기술 및 고급인력의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배출한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해서는 장기적으로 충남의 경제 및 산업발전에 있어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고급인력의 유출을 막고 충남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광역권내 고급인력(대졸이상)의 이동현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총대졸 유출	지역 잔존율	수도권 유입률
수도권	4,492	119	94	127	113	63	22	5,030	0.89	0.893
충청권	287	1,346	28	90	19	29	1	1,800	0.75	0.159
호남권	179	29	1,648	8	17	5	2	1,888	0.87	0.095
대경권	231	65	15	2,297	248	29	3	2,888	0.80	0.080
동남권	93	6	3	68	1,852	4	4	2,030	0.91	0.046
강원권	200	18	10	13	13	487		741	0.66	0.270
제주권	20		7	2	3		317	349	0.91	0.057
총대졸 취업유입	5,502	1,583	1,805	2,605	2,265	617	349	14,726		
총대졸자 유출	5,030	1,800	1,888	2,888	2,030	741	349			
순대졸 유입률	1.09	0.88	0.96	0.90	1.12	0.8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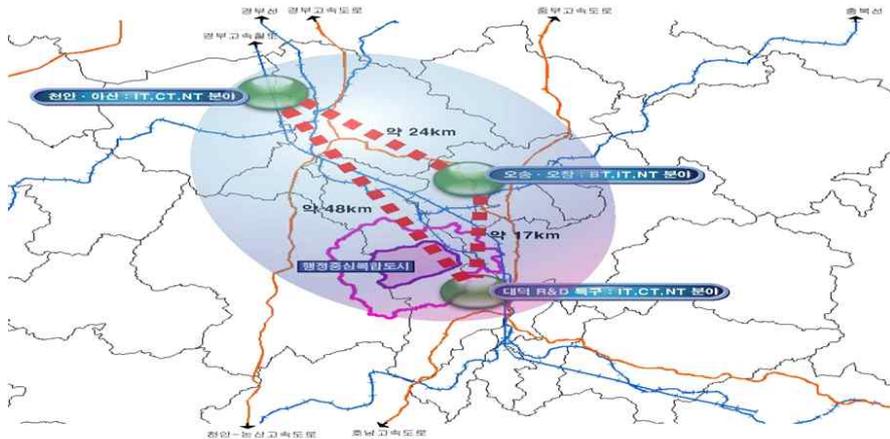
자료 : 산업연구원, 2009.

세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선도산업추진을 통한 충청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충청광역경제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선도산업은 New IT와 의약바이오 분야로 충남은 New IT와 관련된 디스플레이와 부품소재 분야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는 충남의 전략 산업과 일치하고 있으며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충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세종시와 연계된 클러스터를 충청권 3개 지자체가 협조하여 지정하고 이를 충청권의 핵심 경쟁거점화하는 전략과 함께 천안·아산-세종시 지역이 충청권 클러스터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림 12> 충청광역경제권 핵심 클러스터



2.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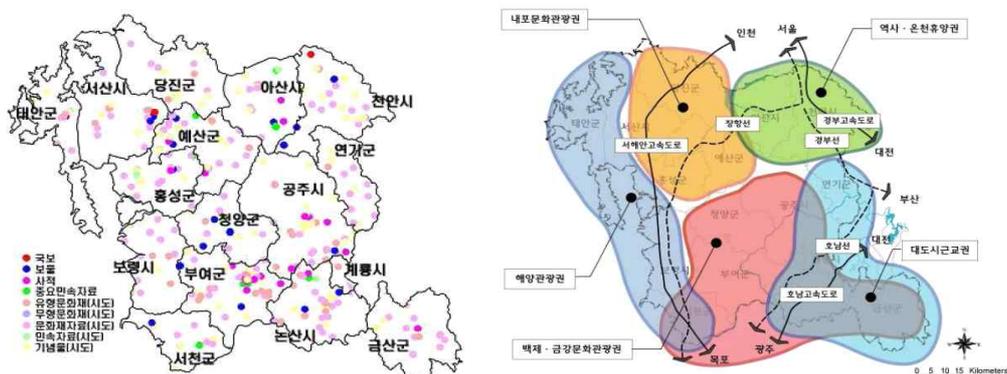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획기적 증진과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매력은 특색있는 지역의 창출로 이어져 전통산업과 함께 지역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는 관광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 중 첫째, 충남의 매력을 발산시키는 점들을 연결하고 이를 지장산업(地藏産業)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문화재나 특색있는 광경을 지역의 이야기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시설의 투자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그보다 더 낡은 시설이 생기면 경쟁력을 잃고 지역의 고민거리로 절락하는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한 가치의 전환을 통하여 충남만의 매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광은 觀國之光의 준말로 지역의 관광은 지역의 빛을, 매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림 13> 충남의 지정문화재 분포 및 5대 관광권역



자료 :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두 번째 과제는 주거복지체계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거복지체계라는 의미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주민들의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즉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더라도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충남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는 각종 서비스의 격차를 양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격차가 삶의 질의 격차로 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세 번째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차원에서 녹색성장과 친환경 도시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선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이 기업이나 산업, 그리고 대규모 개발에 의존하던 기존의 틀을 이제는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속성장의 관점에서 도시의 발전의 개념을 건강한 도시, 무장애 도시, 녹색도시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이 그간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운 보행의 권리, 청정한 음식물 섭취에 대한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등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민선5기 단체장의 자질과 과제

1995년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내걸고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 16년의 세월이 흘러 실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선 5기로 성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는 정착-성숙되었다고 실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숙발전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제도, 중앙정부의 권력독점 등 지방의 발전이 저해되는 요소만을 논해서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성숙한 민선5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맞하기 전에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노력을 단체장이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민선5기 바람직한 단체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충남의 발전에 대한 계획의 승계하고 이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비전 창출과 지위와 권한에 적합하고 부여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제발전에 따른 열매를 지역에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균형적인 감각과 지역의 매력을 증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치역량과 행정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정치역량과 행정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정치역량

민선5기 자치단체장이 가져야할 자질 중 정치역량이 우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선거과정은 후보공천에서의 갈등, 각각의 후보자와의 경쟁에서 나타나는 이념과 정책에 대한 갈등 등 매우 혼란한 상황을 조정하고 조율해서 지역의 발전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가능한 빨리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를 민선5기 자치단체장은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과 관련된 주민간의 갈등, 시민단체간의 갈등,

그리고 정당간의 갈등에서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중앙에 전달하는 동시에 세종시의 적절한 추진을 위한 정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방주민의 장래를 위한 이념과 철학을 가져야 하고 미래의 비전과 진로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소신있게 구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높은 정치역량을 필요로 하고 또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김안제, 2002 발췌 인용)

2) 행정능력

다음 요건은 행정능력이다. 모든 자치단체장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충남의 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서 핵심적인 것은 행정능력을 통하여 얼마나 효율적인 충남의 자치행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상적인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정책 및 계획수립 능력, 경영 및 관리능력, 조정 및 지도능력, 계획실천 능력 등을 고로 구비하는 것이지만 이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이를 통한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열린 마음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도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도덕성

최근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척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공직자들의 부패와 관련된 한 신문의 사설이다.

「충남 논산시의 7급 공무원은 2년에 걸쳐 41억여 원의 예산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국세청의 국장급 간부는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 하여금 비싸게 사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6급 공무원은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36차례의 골프 접대와 뇌물을 받은 것이 적발됐다. 어제와 그제 이들 사이에 새로 불거진 공무원 비리들이다. 요즘 들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자고나면 터져 나오다시피 한다. 검찰이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 예산과 각종 보조금, 기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한 공무원은 696명이며 횡령 금액만도 1000억 원에 이른다. 그중에는 장애인수당 26억 원을 착복한 공무원과 군량미 3550가마(2억7000만 원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내다판 육군 원사도 있다. 얼마 전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신용카드 위장 가맹업체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고 금품을 받아오다 적발됐다(중략). 동아일보. 2009.11.19자 사설 : 자고나면 터지는 공직비리, 부패척결 무색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가져야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도덕성이다.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자 주민의 대표인만큼 당

연히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건전한 양식과 성실한 자세,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 화합하고 이해심이 깊은 인간성, 정직하고 청렴한 생활 등을 통하여 지역의 모범이 되는 사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도덕성은 정치역량이나 행정능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근 불거진 공직부패뿐 아니라 선거직 단체장들의 부정행위의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우리 손을 통해 선출된 단체장이 지역을 경영하는 경험이 20여년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번 6월 선거를 통해 출범하게 될 민선5기는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소득 2만불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이제는 새로운 발전의 발돋움을 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충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발전이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성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이제 같이 해결하고 수정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내륙의 저 발전, 지역간의 격차와 같은 문제들은 충남도청 이전과 세종시의 건설과 지역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통해, 그리고 모든 차원을 수렴하고 비전을 만들어낼 단체장의 성숙된 리더십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일환(200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김동훈(1996). “민선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역할”, 대전충남포럼, Vol. 2.No.2.
- 김신복(2001). 「발전행정론」, 서울: 박영사.
- 김안제(2002). “2002 지방의 선택, 누구를 뽑을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세미나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 배용수(2000). 「지방자치경영론」, 법문사.
- 이달곤(1994). “행정쇄신정책토론회,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 바람직한 민선단체장의 역할”, 행정쇄신위원회.
- 임수복(2002).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정치리더십: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정치리더십”,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회의 보고서.
- 산업연구원(2009). 고급인적자원의 광역권 간 이동과 정책적 시사점.
- 정영운(2000). “민선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최정의(2006). “지방자치단체장 역할에 대한 실증 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충남넷, <http://www.chungnam.net>.
- 충청남도 재정공시자료, 2009.

| 제 2 주 제 |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김 난 영

(선문대학교 국제레저관광학과)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김 난 영 (선문대학교 국제레저관광학과)

I. 서론

관광산업은 높은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의 핵심적 분야로 주목받아 왔다. 관광산업은 인구와 산업측면에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이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핵심사업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30%, 지역특화발전특구의 24%,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30%가 관광관련 사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인하며 큰 인기를 모았던 화천산천어축제의 경우 인구 2.5만명의 화천에 예산 7.5억을 투입하여 395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총리실 외, 2009).

충청남도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07월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는 서해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충남의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지속으로 2009년에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를 2010년 메가 이벤트로 연계하였다. 대전, 충북과 함께 손잡고 추진하는 '2010 대 충청방문의 해'와 '2010 충남 민속문화의 해'를 추진하고 2009년의 pre-대백제전을 완성시킨 '대백제전'을 동시에 개최하면서 충남 관광산업의 일대전기를 마련하고자하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2006년 충남 지역주민들의 의식조사결과, 충남의 도민은 충남이 첨단산업 중심지(26.7%), 행정중심지(25%), 관광여가산업 중심지(21.9%) 순으로 지역이 향후 발전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충남의 시군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의 경우는 무엇보다 관광·휴양도시로의 육성을 가장 중요한 발전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서해안 일대 시군의 경우는 관광산업 육성에 가장 큰 관심을 표출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들 또한 관광산업이 충남의 대표적인 지역사업의 하나로 성장하길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청남도, 2008).

이러한 충남 지역민의 바램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서해안 유류유출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충남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달려온 민선4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 관광산업의 현위치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민선5기 충남도정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충남 관광여건 및 현황분석

1. 지역환경분석

충남의 지역현황은 입지여건, 자연환경, 인문환경, 지역경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충청남도, 2008).

충남의 대외적 입지여건은 [그림 II-1]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환해양권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역이다. 중국 관문항인 대련항과 청도항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류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과 내륙 연계가 가능한 항만개발 적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교류거점을 구축하는데 있어 용이하다. 대내적 입지여건은 국토의 중심부이며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면서 수도권의 입출여력을 흡수하여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이 수행가능하다. 또한, 고속도로, 철도 등이 충남지역을 동서와 남북으로 통과하거나 계획되고 있어 지역내 도로망과 연계체계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림 II-1] 동북아에서 충청남도의 위상



자료 : 충청남도(2008).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p13.

충남의 자연환경은 전체적으로 저지대 지형이며, 경사도 완만하다.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이며, 도서가 259개로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고 그 중 태안반도가 충남에서 가장 큰 반도이다. 대표적 하천으로는 금강, 안성천, 삽교천이 있다. 충남의 인문환경 중 행정구역의 총면적은 2005년 기준으로 국토 전체면적의 8.6%이며, 행정구역상 7개시와 9개군으로 나뉜다. 충남 총인구는 전국의 4% 천안의 인구비중이 2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연평균 0.5%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인구는 13.3%로 전국의 8.9%를 상회하고 있다. 충남의 도시지역 면적은 충남 전체면적의 10.8%로 전국의 17.1%보다 낮으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6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분포에 있어서는 농림지역이 5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지역총생산액이 전국의 5.4%에 달하고, 산업별 구성비 측면에서는 전국과 비교해 농림어업 비중이 3배 정도 높은 반면, 서비스업 부분은 전국 평균치 6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추이에서는 1차산업 비중이 낮아지고, 2차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산업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구조는 전국평균과 비교해 1차산업 비중이 높고, 2차 및 3차 산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간접자본시설면에서는 도로포장률이 72.8%에 달하며, 주택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총 5,929명을 수용할 수 있는 92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광자원 현황분석

충남의 관광자원 현황은 관광자원, 자연자원, 인문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충청남도, 2009;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0). 충남의 관광자원 현황은 <표 II-1>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표 II-1> 충남 관광자원 현황

구분	개수	내용
관광자원		
관광지	25	대천해수욕장, 삼교호, 구드래, 태조산, 신정호, 안면도 등
관광특구	2	보령해수욕장, 아산시 온천
자연자원		
국립공원	2	계룡산, 태안해안
도립공원	3	칠갑산, 대둔산, 덕산
군립공원	1	연기 고북저수지
자연휴양림	14	태학산, 금강, 성주산, 오서산, 영인산 등
해수욕장	39	대천, 무장포, 만리포, 천리포, 꽃지, 몽산포, 학암로 등
온천지구	30	온양, 도고, 아산, 덕산, 마곡, 홍성 등
인문자원		
관광농원	67	천안시, 태안군, 연기군, 서천군 등
녹색농촌체험마을	62	서천군 남당마을, 부여군 백제인동마을 등
어촌체험마을	11	서천군 송석마을, 태안군 대야도마을 등
역사문화자원		
문화재	905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사찰	80	동학사, 수덕사, 갑사, 마곡사 등
향토축제	70	한산모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충청남도(2009). 충남도정

먼저, 관광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 접근이 용이하고 개발제한이 적어 관광정책적으로 개발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2008년 12월기준 전국의 관광지

지정 현황은 총232개이며 이중 충남에 25개(약11%)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관광단지는 2009년 현재 전국에 총21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충남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관계법령 배제 혹은 완화와 서비스 안내체계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관광특구는 전국의 총26개 중 충남에는 2곳, 아산시온천과 보령해수욕장이 지정되어 있다.

충남의 자연자원 중 자연공원은 총5곳으로 이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안해안 국립공원은 해안절경과 육지를 대표하는 해안공원이며, 계룡산 국립공원은 대표적인 명산이다. 이러한 국립공원의 연도별 탐방객 수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그 추이를 살펴보면,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경우 20개 국립공원 중 대체적으로 낮은 탐방객 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부터 약간의 변동폭은 있으나 관광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8년에는 관광객 23만2천명으로 국립공원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계룡산 국립공원의 경우 20개 국립공원 중 대체적으로 중간정도의 탐방객 수를 보이다 2008년에는 관광객 202만명으로 전년대비 65% 상승하였다.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총114개가 있으며 이중 충남에 14개가 있다. 특히, 자연휴양림은 충남의 시군에 고루 포진하고 있으며 이용현황에 있어서는 2008년도 기준으로 2,168,722명으로 전국의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약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강원도 22개 자연휴양림 이용객 894,900명 보다 약2.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은 충남에 39개가 있으며, 지역적으로 태안군에 32개소, 보령시에 5개소, 당진군과 서천군에 각1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태안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7년을 기준으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태안군 13,803,840명, 보령시 12,449,750명, 서천군 2,221,270명, 당진군 146,020명 순으로 나타나 보령시 해수욕장이 5개소에 불과하나 태안군과 그리 차이하지 않는 이용현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사고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50%정도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에는 보령에 16,991,676명(전년대비 19%증가), 태안에 14,704,320명(전년대비 202.9%증가), 서천군 412,113명(전년대비 17.6%감소), 당진군 10,100,907명(전년대비 14.7%증가)으로 나타나 서천을 제외하고 대폭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천지구는 전국에 총417개가 있으며, 이중 충남에 30개가 있어, 경북 90개, 경남 50개, 강원과 경기 49개 다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현황 측면에서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 9,692,000명이 찾은 경남 온천지구와 비교해 충남 온천지구 이용객이 9,359,000명으로 비슷한 수준의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온천지구가 90개인것을 감안한다면, 충남의 온천지구의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농원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지역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총430개가 있으며, 그 중 충남에는 67개가 있어, 71개가 있는 전남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전국에 총364개 중 충남에 62개가 있어 전국의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촌체험마을은 전국에 112개 마을(17개 마을은 장래조성계획) 중 충남에 11개 마을(4개 마을 장래조성계획)이 있어, 전남의 31개(2개 마을 장래조성계획), 경남의 18개 마을 다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은 서천군과 태안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자원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구분된다. 전국의 문화재는 총10,272개가 있으며, 이 중 충북지역에 국가지정문화재 203개, 시도지정문화재 674개, 등록문화재 17개로 총905개의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북 1,718개, 경남 1,395개, 서울 1,248개, 전남 1,089개 다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27개, 보물 91개, 사적 47개, 사적 및 명승 1개, 명승 1개, 천연기념물 14개, 중요무형문화재 3개, 중요민속자료 19개가 있으며, 시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61개, 무형문화재 34개, 기념물 157개, 민속자료 19개, 문화재 자료 303개가 있다.

특히, 이러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지역에서도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과 이해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충남에 총 16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소양교육과 국내외 문화유적 답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과 더불어 민속공예 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아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공주시 웅진성에서 수문병교대식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찰은 충남에 8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은 사찰문화 체험을 위한 숙박시설로 상품화하여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에 100개의 템플스테이가 있으며 그 중 충남에는 9개가 있다. 전체 템플스테이 이용객은 큰 상승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내국인 이용객이 92,694명, 외국인 이용객이 20,106명으로 총112,800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총이용객 수는 내국인이 많지만, 매년 이용객 증감률 측면에서는 외국인 이용객 증가율이 내국인보다 두 자릿수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향토축제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충남에서는 70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7개로 <표 II-2>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보령머드축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지정받았다. 그 외 최우수 축제 1개, 우수축제 2개, 유망축제 2개, 예비축제 1개를 지정받았다. 보령

머드축제, 공주부여백제문화제는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의 참여율이 높고, 강경젓갈, 천안흥타령, 금산인삼축제의 경우는 내국인 관광객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유발효과 측면에서는 금산인삼축제가 가장 높으며, 공주부여백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주부여백제문화제는 예비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참여율이 높고, 경제적 유발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충남 문화관광축제 주요결과

(단위 : 명, 백만원)

축제명	지정구분	내국인	외국인	총계	경제적 효과
보령머드축제	대표	2,183,000	83,000	2,266,000	54,660
금산인삼축제	최우수	969,537	7,208	976,745	80,134
강경젓갈축제	우수	1,141,000	13,425	1,154,845	42,655
천안흥타령축제	우수	1,130,000	20,000	1,150,000	20,459
한산모시문화제	유망	140,000	10,000	150,000	208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유망	531,930	21,000	552,930	9,394
공주부여백제문화제	예비	1,428,530	110,190	1,538,720	68,07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184.

3. 관광사업체 현황분석

충남의 관광사업체현황은 관광진흥법상의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국제회의업과 카지노업은 충남지역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관광숙박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관광호텔의 경우 1025개,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2178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보유객실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용률에 있어서는 44%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호텔의 지역적 위치를 살펴보면 과거의 대표 온천관광지인 아산지역에 관광호텔 6개와 휴양콘도미니엄 5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근처 천안에 관광호텔 2개와 가족호텔 1개가 위치하고 있어 과반수이상의 관광숙박업체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편의시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펜션업은 소규모 고급민박시설로 주요 숙박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총18개 업체에 249개 객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으로는 강원(43개), 제주(41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구분	호텔업									휴양 콘도 미니업	총계
	관광호텔						수상관 광호텔	가족 호텔	전통 호텔		
	특1급	특2급	1급	2급	3급	미정					
업체수(개)	-	3	2	7	-	5	-	1	-	10	28
객실수(개)	-	329	169	289	-	238	-	100	-	2,078	3,203
이용률(%)	44.36% (외국인15%, 내국인 3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여행업은 <표 II-4>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내국인의 국외여행 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국외 여행업체와 내국인의 국민관광 수요충족을 위한 국내여행업체가 총여행업체 중 3%만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여행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단위 : 개(%))

구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총계
충남	-	144(3)	177(5)	321(3)
전국	705(100)	5,329(100)	3,616(100)	9,650(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변화하는 관광여가행태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휴양시설로 <표 II-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휴양업 4곳이 영업 중인데, 종합휴양업은 천안상록리조트, 전문휴양업은 아산스파비스, 아산과라디스, 금산의 서대산레저타운으로 대부분 지역적으로 아산,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현황

(단위 : 개(%))

구분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 기념품판매업
충남	3(8)	1(6)	-	-	-	-
전국	38(100)	18(100)	-	7(100)	2(100)	117(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광편의시설업은 앞에서 살펴본 관광업 외에 사업이나 시설 중 관광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표 II-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관광편의시설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관광편의시설업 등록현황

(단위 : 개(%))

구분	관광유흥 음식점업	관광극장 유흥업	외국인전 용유흥음 식점업	관광 식당업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 사진업	여객자동차 차터미널 업	관광 펜션업	관광 삭도업
충남	-	10(6)	-	49(32)	-	-	-	18(12)	-
전국	77(100)	171(100)	197(100)	1,532(100)	12(100)	20(100)	-	152(100)	6(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유원시설업은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총217개 업체 중 충남에 13개 업체(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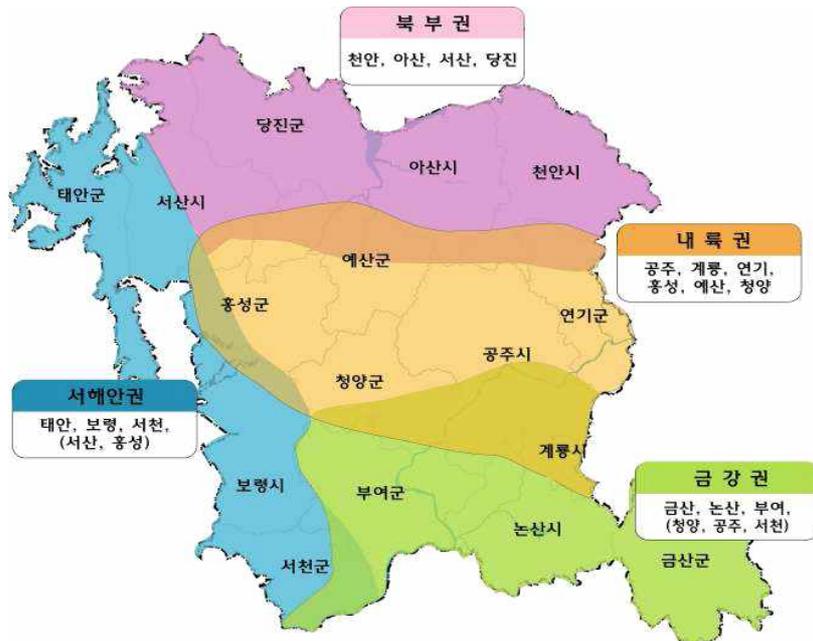
4. 주요 관련계획 검토

주요 관련계획 검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동·서·남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국토해양부 등,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09; 충청남도, 2008, 200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충남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로는 개성과 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창출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개발전략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차원에서 충남은 개성 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전략을 세웠다. 주요 지역개발사업으로 서해안과 백제와 내포문화권을 연계한 관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교통망으로 당진-울진, 서천-영덕 고속도로, 대전-서천 고속화도로, 충청철도(보령-조치원), 서해안철도(야목-안중-예산) 등의 건설과 장항선 개량 및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한다.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그림 II-2]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충남의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북부권은 환황해경제권의 전진기지, 충청권의 신성장 거점지대 육성, 서해안권은 해양산업·신산업(융합)벨트, 해양·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 내륙권은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로 육성(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연계하여 역사·문화·녹색관광벨트구축), 금강권은 금강역사·문화·생태관광벨트, 생명산업과 전원도시화지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을 발전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권역별 발전추진을 위해 4대 거점사업으로 백제문화권개발, 내포문화권개발, 서해안 관광산업벨트 조성, 금강권 광역복합개발을 선정하였다. 특히, 금강권에서 금강은 수자원, 역사·문화자원, 경관·환경자원, 토지자원,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을 활용하여 금강권광역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충남 남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테마형 관역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근교·관광농업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근교형 전원주거지 개발, 수자원·관광개발 및 도시근교형 산림·수변생태공원 조성 추진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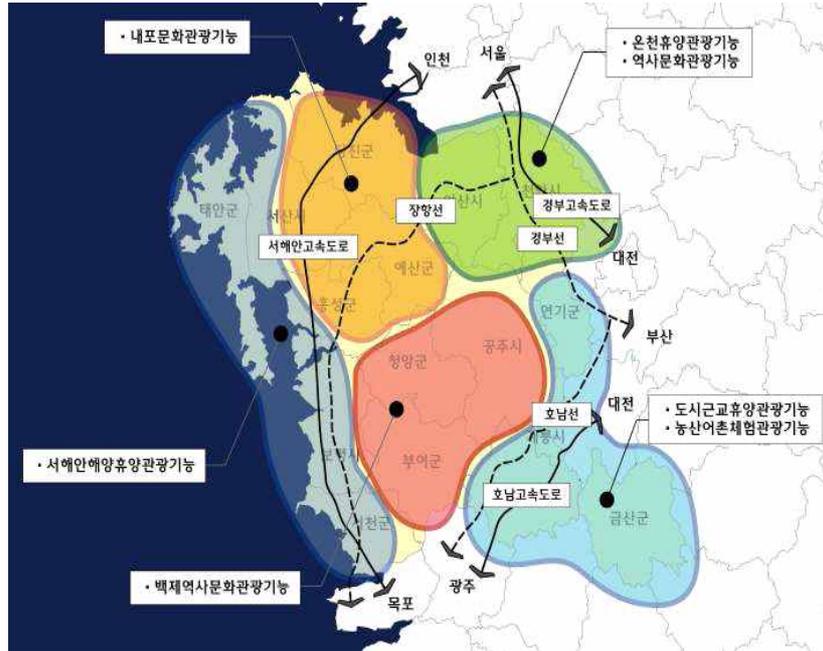
[그림 II-2] 충청남도 4대 개발경영권



문화체육관광부가 10년에 한번 전국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수립하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은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관광한국,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관광한국, 관광자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기반형 관광한국,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참여형 관광한국,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개방형 관광한국 등의 계획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개발방향은 전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고 관광권역별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충남지역은 ‘서해안 해양관광 중심지역의 육성’을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충남도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그림 II-3]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권역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즉, 보령, 서천, 태안군 지역은 해양관광권, 천안과 아산지역은 역사온천휴양권, 공주, 부여, 논산, 청양군은 백제금강문화 관광권, 서산, 홍성, 예산 당진군은 내포문화권, 계룡, 금산, 연기군은 대전 근교권으로 권역화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특정지역에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적 조성공간으로, 정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관광단지과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이다. 이러한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3개 지역 중 충남의 태안이 2007년 가장 먼저 착공되었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환경 지역친화적 도시, 동북아 최고 관광휴양도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휴양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볼거리, 놀거리, 쉼거리, 먹거리, 살거리, 정주 및 생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고품질 미래형 관광레저 단지 개발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림 II-3] 충청남도 관광개발 방향



자료 : 충청남도(2009).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p38.

한편, 정부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자 6대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충남을 포함해 경기, 전북, 전남에서 서해안과 연결한 20개 시군(충남에서는 아산, 서산, 보령시, 당진, 태안, 홍성, 서천군 7개 시군을 포함)을 대상지역으로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해안권의 계획수립 방향은 인문자연 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관광개발, 집객력 있는 해양관광거점 조성 및 연계관광지 개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친환경적 지속가능 관광개발, 실천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개발의 추진이다.

2009년 12월 발표한 동·서·남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따르면, 해안권별로 자연, 산업 등에서 각각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환경과 고유한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글로벌 관광명소화와 함께 고품격 녹색극토를 창출하는 선도역할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서해안 초광역개발지역은 인천, 경기, 충남, 전북 해안 및 인접한 내륙지역 시도 4개, 시군구 25개, 인근 섬 587개를 포함하며, [그림 II-4]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관광 측면에서는 글로벌 해양 생태 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동북아의 관광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충남지역(태안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관광거점을 조성하며, 서해갯벌 등 생태 및 역사문화자원 연계해 생태테마 및 스토리텔링 관광개발 등을 통해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또한,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한 해양레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요지역별 해양레저 복합단지, 새만금권에는 명품 해양레저도시를 조성하도록 하며, 수도권의 크루즈·해양레저 수요를 위해 아라뱃길 연계루트를 개발하도록 추진 계획 하고 있다.

[그림 II-4] 서해안 초광역권 개발 방향



자료 : 국토해양부 등(2009). 동서남 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p15.

III. 관광시장 여건분석

1. 외국인 국내여행 동향

외국인의 국내여행 동향을 살펴보면(문화체육관광부, 2009), 2008년 약690만명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관광객은 전년대비 7.3% 증가하여 약 509만명을 기록하여 전체 외래 관광객의 73.9%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관광객이 34.5%, 중국 관광객이 16.9%, 대만 관광객이 4.6%, 홍콩 관광객이 2.3% 그 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주지역(미국, 캐나다) 관광객은 전년대비 3.9% 증가하여 약74만명을 기록해 전체 외래 관광객의 10.8%를 차지하였다. 구주지역 관광객은 전년대비 5.9% 증가하여 약59만명을 기록, 전체 외래 관광객의 8.6%를 차지하였다. 대양주 관광객은 18.3% 성장해 약13만명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외래 관광객의 1.9%를 차지하였다. 그 외 아프리카주 관광객이 약2만6천명, 국적미상이 약1천6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포의 방문도 약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 관광객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일본 관광객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 1990년대에 전체 외래 관광객의 과반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일본 관광객은 200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02년도에 잠깐 상승했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34.5%라는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시장은 1990년대 이래 서서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전체 외래

관광객의 16.9%를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200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3년간 한국의 방문횟수를 보면 1회 56.3%, 2회 15%, 3회 8.2%, 4회이상 20.5%로 나타났다. 한국 체재기간은 평균 6박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2박 28.7, 3박 17.9%, 4박 15.7%, 11-60박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형태에 있어서는 개별여행이 49.1%, 단체여행이 42.6%를 나타내었으며, 여행형태별 총지출경비에 있어서는 개별관광이 1,123.6(\$), 단체관광 1,446(\$)로 나타났다. 방문목적에 있어서는 여가/위락/휴가가 40.4%, 사업/전문활동 42%, 친구/친지방문(11.5%), 기타(6.1%)로 나타났다. 한국방문선택시 고려요인으로는 쇼핑 44.4%, 음식/미식 탐방 41.5%, 경제적인 여행비용 27.2%, 가까운 거리 40.1%, 자연풍경 감상 23.4%로 나타났다. 한국 여행정보 입수경로는 인터넷 55.5%, 친지/친구/동료 48%, 여행사 35.6%, 관광안내서적 29.4%, 보도 15.4%로 나타났다. 여행 동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 34%, 직장동료 26.4%, 배우자/연인 23.8%를 나타내었다.

여행시 이용 숙박시설은 호텔 77.8%, 친척/친구집 9.5%, 유스호스텔/게스트하우스/여관 6.4%, 학교/회사기숙사/연수원 4.2%, 콘도/펜션/레지던스 2.1%, 사찰 0.1%로 나타났다. 한국 여행 중 인상 깊은 방문지로 명동 20.7%, 고궁 19.9%, 동대문시장 13.4%, 남대문 시장 14.5%, 남산/N타워 8.9%, 부산 12.6%로 나타났다. 방한기간 중 활동으로는 쇼핑 57.1%, 관광지 방문 48.3%, 식도락관광 33.3%, 업무수행 25.1%, 미팅/회의/학술대회 등 참가 14.1%로 나타났다. 한편, 쇼핑과 관련하여서는 주요 쇼핑품목이 식료품 38.1%, 향수/화장품 23%, 의류 26.6%, 인삼/한약재 17.2%, 김치 1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쇼핑장소로는 공항면세점 45.9%, 명동 21.3%, 백화점 28.2%, 소규모 상점 24.3%, 동대문 시장 21%, 시내면세점 15.8%, 대형 할인점 19.6%, 남대문시장 15.1%, 인사동 8.5%, 이태원 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한국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8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출입국절차, 숙박, 음식, 쇼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관광지매력도, 관광안내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보다는 대체적으로 조금 낮은 보통이상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이내 관광목적으로 재방문의향은 72.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여행에 대한 타인 추천의향에 있어서도 81%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한국 여행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냐는 질문에는 69%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여행에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언어소통(55%)으로 들어났다.

한국여행 중 지역별 방문지로는 서울 77.4%, 경기/인천 37.2%, 경상 20.9%, 제주 12.4%, 강원 11.2%, 충청 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청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문지로는 대전(57.9%)의 방문 비율이 과반수를 넘으며, 단양 14.7%, 공주/부여 11%, 금산 인삼타운 10.5%, 대천/보령 8.2%, 수안보 6.5%, 천안 4.1%, 청주 3.4%, 아산 1.2%, 진천 0.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관광객의 경우

대전을 제외 하고 공주/부여, 천안, 단양 순으로 관광객 비율이 높으며, 중국 관광객의 경우는 대전을 제외하고 대천/보령과 단양의 방문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금산인삼타운, 공주/부여 순의 방문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주/부여, 금산인삼타운, 대천/보령의 방문목적은 여가/위락/휴가, 친구/친지 방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과 아산은 사업/전문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총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8년에는 740,482명의 외래 관광객이 충남을 찾아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외래 관광객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자료가 2005년 이후에는 유료관광지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약간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특징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표 III-5>의 통계자료를 참고하면 오히려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I-1> 충남 외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충남	654,206(12.2)	755,261(15.9)	670,491(11.5)	515,668(8.6)	519,845(8.5)	752,057(11.7)	740,482(10.8)
전체	5,346,118(100)	4,752,762(100)	5,818,138(100)	6,022,752(100)	6,155,046(100)	6,448,240(100)	6,890,869(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381.

충청남도(2009). 2009 도정백서. p453.

주 : 2005년부터 유료관광지에 한해 작성

2. 국민 국내여행 동향

국민 국내여행 동향은 2008 국민여행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2009)를 중심으로 2009 도정백서(충청남도, 2009)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되었다. 먼저, 내국인의 국내여행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국내여행 참가자 수는 37,391,314명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일 여행 참가자수는 30,461,915명으로 전년대비 0.03% 줄고, 숙박 여행 참가자 수는 31,350,952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여행 경험률은 총92.3%이며, 국내여행 참가횟수는 숙박여행 2.58회, 당일여행 3.48일로 총6.07회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여행의 경우 1박 2일이 61.3%로 가장 많고, 2박 3일이 26.5%이며, 당일여행의 경우 10-11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22.1%, 6-7시간은 20.4%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목적은 숙박여행의 경우 친구/친지 방문이 50.3%로 가장 높고 여가/위락/휴가가 41.5%로 뒤를 이었다. 당일여행의 경우는 여가/위락/휴가가 61.9%로 가장 높고 친구/친지 방문이 25.7%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시 동반자 수는 숙박이나 당일여행 모두 2-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반자 유형으로는 가족/친지의 뒤를 이어 친구/연인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으로는 자가차량이 숙박여행의 경우 70.2%, 당일여행의 경우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숙박여행시 이용 숙박시설로는 가족/친지집이 55.3%로 가장 높고, 펜션 9.8%, 콘도 8.6%, 모텔/여관 8%, 민박 4.9%, 호텔 3.4%, 야영 2.2%로 나타났다. 여행방문지 선택시 주로 참고하는 정보는 친구/친지 권유가 60.8%로 가장 높고, 인터넷이 26.4%로 나타났다. 여행지 선택시 고려요인으로는 자연경관이 2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볼거리 다양성 24.7%, 여행 경비 9.9%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3.79(5점 척도)로 보통수준을 훨씬 상회하며 73.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분야별로는 숙박에 대한 만족도(3.70)가 가장 높고, 쇼핑에 대한 만족도(평균 3.1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여행분야는 볼거리/관광내용이 44.4%로 가장 높고, 관광편의시설 10%, 종사원 자질 및 서비스 9.9%, 여행비용 8.9%,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7.3%, 교통 4.3%, 숙박 3.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로 거론된 볼거리/관광내용에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는 요인으로는 지역별 특색/독창성 부분이 27.5%, 재미/흥미가 18.8%, 축제/이벤트 내용빈약이 16.6%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국내여행 방문지로 어느 곳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 III-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8년기준 국내숙박여행지로는 강원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 경남,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당일여행지로는 경기를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서울, 경남,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충남이 국내여행 방문지 선호도 순위면에서는 4위로 나타났지만, 선호도 비율면에서는 국내숙박여행에서는 떨어지고, 당일여행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72.9%가 만족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평균 3.78(5점 척도)로 보통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다른 시도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도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만족도가 평균4.06으로 가장 높고, 대전의 만족도가 3.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2> 국내여행 상위 방문지

(단위 : 명, %)

순위	국내숙박여행			국내당일여행		
	2008	2007	2006	2008	2007	2006
1	강원(15.7)	강원(14.0)	강원(14.3)	경기(21.9)	경기(18.0)	경기(18.8)
2	경기(13.3)	경기(12.2)	경기(13.1)	서울(13.5)	서울(13.2)	경남(12.3)
3	경남(10.0)	경남(10.5)	경남(10.0)	경남(10.0)	경남(10.6)	서울(8.7)
4	충남(8.7)	충남(9.1)	충남(9.5)	충남(7.7)	8위: 충남(5.9)	5위: 충남(8.0)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9). 2008 국민여행실태조사. p24.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로는 <표 III-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8년 기준 강원도 가장 높으며,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순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방문 희망지역으로는 제주가 가장 높고, 강원, 북한, 경북, 전남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10위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지

역 방문후 재방문의사 및 타인추천의사를 물어본결과 <표 III-4>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8년기준 90.1%가 재방문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충남지역 방문에 대한 타인추천의사에 있어서는 이보다는 다소 낮은 86%가 충남지역을 추천할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추천의사는 최근 3년간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기억에 남는 방문지 및 향후 방문 희망 상위 지역

(단위 : %)

순위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			향후 방문 희망 지역		
	2008	2007	2006	2008	2007	2006
1	강원(16.6)	강원(12.9)	강원(15.0)	제주(34.0)	제주(31.9)	제주(34.1)
2	경기(10.6)	경기(11.0)	경기(9.9)	강원(14.0)	북한(20.6)	북한(19.0)
3	경남(9.2)	경남(7.8)	경남(9.6)	북한(13.3)	강원(14.7)	강원(14.9)
4	경북(8.0)	경북(7.6)	경북(8.3)	경북(9.1)	경북(6.5)	경북(6.4)
5	충남(6.9)	충남(7.0)	충남(7.8)	10위: 충남/경기(1.1)	10위: 충남(1.3)	9위: 충남(1.5)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9). 2008 국민여행실태조사. p31.

<표 III-4> 충남지역 재방문의사 및 타인추천의사

(단위 : %)

재방문의사			타인추천의사		
2008	2007	2006	2008	2007	2006
90.1	90.5	89.3	86.0	84.7	83.9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9). 2008 국민여행실태조사. p32.

충남의 내국인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4년도까지는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 이후 통계자료가 무료관광지에 대해서는 내외국민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내국인 방문객 수를 추정하기는 힘들다, 충남의 유무료 관광지의 총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내국인 방문객 수도 함께 증가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총 충남 관광객 수가 1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감소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2009년도에는 충남관광객수가 89,632,694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남 보령과 아산, 태안, 당진 4개 시·군을 찾은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58%를 차지해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선, 2010).

<표 III-5> 충남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내국인	62,566,945	65,105,850	66,849,732	26,518,424	20,853,650	22,473,924	23,379,397
외국인	654,206	755,261	670,491	515,668	519,845	752,057	740,482
내외국인 무료관광지	-	-	-	55,969,121	64,327,172	63,353,189	51,233,209
총계	63,221,151	65,861,111	67,520,223	83,003,213	85,700,667	86,579,170	75,353,088

자료 : 충청남도(2009). 2009 도정백서. p453.

향후, 충남의 내국인 관광객 수요는 <표 III-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5-2010년 사이에는 2.97%, 2010-2020년 사이에는 3.34% 증가하여 2020년에는 관광객이 126,815,000명으로 증가하여 전국관광객의 14.9%가 충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I-6> 충남 관광객 수요예측 결과

(단위 : 천명, %)

구분		2005	2010	2020
총관광객	전국	554,400	637,328	850,264
	충남	83,003	95,339	126,815
숙박 관광객	전국	246,576	282,459	374,620
	충남	35,276	40,138	53,125
당일 관광객	전국	307,824	354,869	475,644
	충남	47,727	55,201	73,679

자료 : 충청남도(2008).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p189.

IV.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관광기반구조의 확충 및 강화

충남의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관광사업체는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관광숙박업의 경우 총 수용인원도 부족하고 과반수이상의 숙박시설이 아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인 천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충남관광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이 호텔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시각에서 충남에 최고급 숙박시설인 특1급호텔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있지만(한중구, 2009), 관광상품의 가격경쟁력을 고려하고 현 관광숙박업 이용률이 44%인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광객 유치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행사는 국민의 국내여행이나 국외여행을 알선하는 업체가 전국의 총여행업체 중 3%만이 존재할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일반여행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남이 일본과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면서 외국인 유치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담 지정여행사와 체결을 맺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함학섭, 2010), 도내 일반여행업체를 유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변화하는 관광여가행태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기타 관광진흥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관광편의시설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적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교통기반구조 확충

충남의 대외적 입지여건은 환해양권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일 뿐 아니라 대내적 입지여건은 국토의 중심부이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대외적 입지여건의 장점을 살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관광객을 송출하는 중국과 일본간의 교류잠재력을 현실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더 활발한 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충남 서해안 지역에 국제여행객터미널 개설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관광상품의 가격경쟁력은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충남이 교통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사업의 충남의 다른 지역도 연계해 줄 수 있는 연결도로 건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9년 5월 개통된 대전-당진, 공주-서천 고속국로 개통에 따라 해당지역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효과를 주변 지역에서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두 고속국도의 개통은 충남을 1시간 권으로 단축시킴으로써 기존에 숙박관광목적지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당일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시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숙박관광지 감소를 고려해 보았을 때(나인문, 2009) 경쟁력 있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연결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면 새로운 관광코스가 개발될 수 있으며 기존의 숙박관광지로서의 입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계절 경쟁력 있는 해안관광자원의 육성

충남은 다양한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원유형에 따라 관광객의 반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충남을 대표하는 자연공원인 국립공원(태안해안, 계룡산) 2곳 모두 전체 국립공원의 방문관광객 수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중간 이하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해안의 경우 전국의 20개 국립공원 중 관광객 이용률이 대체적으로 낮았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7년에는 최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해수욕장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사고이후 급락하였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충남 관광객이 여름 휴가철 충남의 서북부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최일, 2010), 특정 계절 외에도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관광상품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작업은 특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도 가능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들이 동반적으로 확충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태안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이 착수되었고, 서해안 초광역개발지역의 글로벌 관광거점 도시로 지정된 만큼 태안의 관광개발사업이 향후 충남 해안관광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경쟁력 있는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자연휴양림은 전국의 시도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온천의 이용률도 전국 온천 중 거의 수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연휴양림과 온천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은 누구보다 건강과 웰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 개발을 통해 그들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재방문율을 높일 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의 여행지 선택시 가장 큰 고려요인으로 파악된 구전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휴양림과 온천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을 단순히 휴양림 방문과 온천만 즐기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의 주변관광지와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의 매력성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축제의 내실화 및 집중화

충남에서는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0여개의 각종 향토문화 축제를 개최된다. 그러나 일부 축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축제들이 지역단위 행사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행사에 참석한 관광객들을 오히려 발길을 끊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평가과정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표에서 예비까지의 평가를 받아 지원받고 있는 7개의 축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 모았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난 보령머드축제와 공주부여백제문화제(대백제전)는 충남을 대표하는 축제상품으로 보다 내실 있게 육성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공주부여백제문화제를 통해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충남 관광객의 관심을 충남의 대표적인 백제문화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대표산출물과 연계된 금산인삼축제는 특히 내국인 관광객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가장 높은 경제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인 만큼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양한 문화자원의 차별화된 관광상품화

충남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데 있어서는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충남은 백제문화권 중심으로 내포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지구, 기벌포 문화유적지 정비, 종교유적지 명소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0 대백제전을 통해 백제문화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해안관광의 이미지가 강한 충청관광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진정한 충남의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존 문화관광지와와의 차별성을 추구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조성되어 있는 유적지를 보는 수준에서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충남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효과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관광객의 체험과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재미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관광자원은 자연자원이나 시설자원과의 연계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국내여행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지역별 특색, 재미와 흥미, 이벤트 등의 빈약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더욱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4대강 사업과 연계한 금강주변지역 활성화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권 금강역사·문화·생태관광벨트 사업을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지 못했던 금강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공간을 창출하여 충남 전체의 약34% 관광매력물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금강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강철새도래지나 신성리갈대밭, 백제문화와 같이 대표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테마와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지역 농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관광농원,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인공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생태적인 관광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다변화 되고 있는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영향력이 큰 드라마, 영화의 소프트웨어로 마케팅 강화

충남의 관광진흥을 위한 2008년 2009년 주요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관광이미지 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홍보에 역점을 두고 주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역, 지하철, 공항 등에 옥외광고와 국내외 우수 관광박람회 참가하여 충남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일본, 중국, 미국 대상 충남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관계자, 국내 중앙지방 언론사 등을 초청해 충남 유명 관광지를 답사 및 설명회개최와 더불어 팸투어를 통해 행사와 축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의 홍보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 차원의 마케팅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강력한 영향력을 단기적으로 발산하여 과급효과를 급상승 할 수 있는 방법으로 TV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때는 오픈세트장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투자보다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충남의 관광자원을 표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투자해가며 앞다퉈 유치한 영화나 드라마 오픈세트장들이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한 두 편을 찍고 난 뒤에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초라한 경영성적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김영인외, 2010). 현재 충남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본과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도 내국인의 매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론

충남은 현재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은 충남의 의지도 있었으나 이러한 의지를 받아들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의 연계는 향후 충남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충남은 지금까지 대내외를 연결하는 국토중심부 교통의 요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저평가 받았을 뿐 아니라 연계도로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변의 대규모 관광수요를 제대로 끌어들이지 못하였다. 또한, 서해(해안) 외 충남 곳곳에 다양한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력성을 관광산업과 연결하는 작업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산하기 위한 다각도적인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상품의 개발노력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정들이 아직 구체적인 가시적 효과를 논하기 어렵지만 충남 관광행정이 2010년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다음 단계에서 더 발전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 관광산업의 현위치를 분석해 보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관광기반구조의 확충 및 강화, 둘째, 지역적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교통기반구조 확충, 셋째, 사계절 경쟁력 있는 해안관광자원의 육성, 넷째, 경쟁력 있는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다섯째, 축제의 내실화 및 집중화, 여섯째, 다양한 문화자원의 차별화된 관광상품화, 일곱 번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금강주변지역 활성화, 여덟 번째, 영향력이 큰 드라마나 영화의 소프트웨어로 마케팅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분석의 결과가 충남 관광산업 발전의 모든 부분을 대변해 줄 수는 없다. 단지, 부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그 어떤 방안들도 환경적, 사회적·문화적,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발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참 고 문 헌>

- 국무총리실 외(2009).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 국토해양부 등(2009). 동·서·남 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충청남도(2008).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 충청남도(2009). 충남도정.
- 한국관광공사(2009). 2008 국민여행실태조사.
- 한국관광공사(2010). 2009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0. 4. 21). 관광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tat.tour.go.kr/ptour1/index.do>
- 강은선(2010. 2. 23). 충남 외국인 관광객 쏠림 심각. 대전일보.
- 김영인, 지성호, 조성민, 김경태, 신재우, 손대성, 최정인, 김지선(2010.01.22). 지자체 투자
 오픈세트장들 대부분 `썩박'. 연합뉴스.
- 나인문(2009. 5. 22). 사통팔달 충남 관광·문화지도가 확 바뀐다. 충청투데이.
- 최일20(10. 2. 5). 충남 관광 여름철 서해에만 반짝. 충청투데이.
- 한중구(2009. 8. 8). 관광 충남에 특급호텔이 없다. 대전일보.
- 함학섭(2010. 02. 20).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10개사 지정 MOU체결. 충북일보.

제 3 주 제

충남의 도·농간 지역균형발전 방안

윤 준 상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충남의 도·농간 지역균형발전 방안

윤준상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I. 서론

이명박정부는 지역정책의 세가지 틀로 4대 초광역벨트, 5+2 광역경제권, 163개 기초생활권 정책을 채택하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기초생활권 정책은 지방분권적·지역통합적 개발의 근간인 동시에 광역경제권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상호보완적 정책이다.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자칫 소외될 우려가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163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휴양거점화, 지역연고자원의 2·3차 산업 융합 등 소득·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농산어촌 기초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67개군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초과)에 진입한 가운데, 농가소득 감소, 기초 생활 서비스 부족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방중소도시도 인구·정주여건·경제력·재정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쇠퇴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중소도시와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충청남도는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도정기조로 삼아 균형 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 있는 농어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건강한 자연환경을 통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건설하겠다는 도정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건설,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기존의 안주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성과주의 행정 강화를 통한 강한 충남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제시도 하고 있다(김선미, 2008).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은 2008년 58조 2천여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농림, 어업, 광업은 그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제조업의 비중 2008년 46.7%로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충청남도 통계자료관, 2010).

충남의 인구는 1990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던 인구는 2001년 이 후 2003년까지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개발 추진 등 균형개발의 영향으로 2004년과 2005년에는 매년 약 2만명 정도의 인구유입이 일어나 2008년 현재 201만 8,537명까지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인구비율도 소폭 증가하여 4.07%가 되었다. 이중 51% 이상이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등 수도권과 인접한 4개 시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구 뿐 아니라 제조업체수의 48.8%, 종사자의 70.9%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별 발전수준은 천안시(1위), 아산시(3위), 서산시(6위), 당진군(5위) 등 북부권에 속한 시군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여(13위), 서천(14위), 논산(9위), 청양(15위) 등 금강과 인접한 지역의 발전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접지역과 수도권으로

부터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금강유역 시군은 상당한 발전격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송두범, 2006).

충남지역의 불균형발전은 내부적으로는 천안·아산 지역은 수도권에 기능적으로 편입되어 성장도가 가속화되지만,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측은 1차 산업중심으로 상대적 저발전 상태에 있어 발전격차가 심화되면서, 충남지역의 정체성, 안정성, 지속성, 유기적 발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 지역은 저성장지역으로, 세종시 인근 지역은 발전지역으로, 충남 서부-북부 지역은 광역수도권 영향권 등으로 충남이 공간적으로 분절될 우려가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성장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켜 지역의 자생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청남도도는 지역 내에 지역불균형 성장을 고려하여 2007년 3월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 5월에 균형발전 지원대상으로 8개 시·군(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을 선정하였다. 또한 2008년에 ‘충청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내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였다(충청남도, 2008).

충남지역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 물적, 공간적 모든 요소가 각각의 특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충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충남 지역 간, 도시·농촌간의 격차를 줄이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이루어져야만 국토시스템과 충남 공간 그리고 하위지역공간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간에 상호이익을 주고받는 지역 간 상생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와 충남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전개내용과 실태를 파악하고, 도·농간 지역격차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충남지역의 도·농간 지역균형발전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도·농간 지역격차의 현황분석

1. 기초생활권의 실태

도·농간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권지역의 실태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권은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 규모 등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① 도시형, ② 도농연계형, ③ 농산어촌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도시형은 대도시에 인접하여 있으며, 대도시 통근·통학권역에 포함되는 시 지역과 인구 20만 이상의 거점도시를 포함한다. 도농연계형은 행정구역상 동으로만 구성된 일반시이나, 농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 20만 미만 일반시, 인구 20만 미만 도농통합시, 그리고 중소도시와 연계가 많은 인구 10만 이상 군을 대상으로 한다. 농산어촌형은 인구 10만 미만의 군지역으로 농산어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표 1> 인구규모 및 도시 접근성에 따른 유형별 해당 시·군 목록

시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계
인천		-	강화군, 옹진군(2)	2
부산		기장군(1)		1
대구		달성군(1)		1
울산		울주군(1)		1
경기	수원시, 성남 의정부,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평택시, 화성시(21)	동두천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포천시(6)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4)	31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3)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4)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11)	18
충북	청주시, 충주시(2)	제천시, 청원군(2)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8)	12
충남	천안시, 아산시(2)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군, 공주시(6)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아군, 금산군, 연기군(8)	16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3)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4)	진안군, 부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7)	14
전남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3)	광양시, 나주시(2)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17)	22
경북	경산시,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4)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7)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12)	23
경남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5)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5)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10)	20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1)	-	1
합계	43	40	79	162

기초생활권을 형성하는 시·군의 인구는 우리 나라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의 중심축에서 소외되어 왔다. 특히, 최근 5년간(2002년~2007년) 인구 변화를 보면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의 발전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이 기간에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는 2.15% 증가하였으나 농산어촌지역은 12.9%나 감소하였다. 반면에 도시는 인구산업의 과밀화, 구도심 쇠퇴 등으로 발전잠재력이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9:23-24).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도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고령화율은 2002년 8.85%에서 2007년 10.78%로 증가하였는데, 농산어촌지역의 고령화율은 17.82%에서 21.64%로 급증함에 따라 교육, 의료, 복지 등 생활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표 2> 기초생활권 유형별 고령화율 추이

	고령화율		인구증감율 (‘03년~’07년)
	‘07년	‘03년	
전국	10.78%	8.85%	2.15%
일반시	9.25%	11.2%	5.11%
도농통합시	12.56%	10.46%	10.02%
군	21.64%	17.82%	-12.9%

소득기회를 나타내는 사업체수, 종사자 등의 통계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할 때 2005년도에는 일반시와 군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단위에서 총사업체수는 축소되었으며 일자리 측면에서도 200년 6배에서 2005년에는 7배 정도로 악화되었다.

<표 3>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교

구분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전체
산업기반	총사업체수(개)	2000년	19,301	13,400	3,771	9,159
		2005년	21,891	14,883	3,683	9,972
고용기회	총사업체 종사자수(명)	2000년	87,349	62,223	14,633	40,648
		2005년	102,900	72,875	15,188	46,658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통근 유·출입 특성을 비교해보면 도시형 시·군은 농산어촌형에 비해 주거공간의 성격이 안층 강하게 나타나며, 경제활동 중심기능도 상대적으로 강하다.

2005년의 상주인구 대비 통근유입인구 비율을 기초생활권별로 집계해보면 도시형이 농산어촌형보다 높아 타 시·군에서 통근 목적으로 유입해 들어오는 인구가 많음을 보여준다. 즉 도시형 시·군일수록 경제활동 중심기능이 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한편 취업인구 대비 통근유출인구 비율을 비교해보면 역시 도시형 시·군에서 그 비율이 더욱 높다.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은 외부에 나가서 하는 주민들도 많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즉 도시형에 속한 지역일수록 경제활동 중심일 뿐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도 농산어촌형 시·군보다 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기초생활권별 통근 유입 및 유출 인구 비교(2005년)

구분	상주인구 대비 통근유입	취업인구 대비 통근 유출
도시형	10.9	30.8
도농연계형	8.7	15.2
농산어촌형	7.9	4.7
전체	8.9	14.2

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시·군별로 집계하여 평균치를 구함

산업부문별 발전수준을 분석하면, 농산어촌형 지자체의 경우 2·3차산업뿐 아니라 농림업 분야에서도 도시형에 비해 매출액이 낮게 나타나 지역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전체 GRDP에서 각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집계하여 유형 간에 비교한 결과가 다음 <표 5>에 나타나 있다. 농산어촌형 시·군을 농림어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이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반면에 도시형 시·군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탁월하며,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동산 및 임대·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이처럼 지역 내 총생산액 기준으로 산업여건을 분석한 결과 바탕으로 각 기초생활권마다의 지역경제 특성을 진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취업구조 및 사업체 업종 구성을 함께 비교해보면 기초생활권별 경제여건을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GRDP 중 각 산업 부문별 구성비의 시·군 유형 간 비교

산업구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체
농림어업	2.1	8.4	16.6	9.4
광업	0.3	1.9	1.1	1.0
제조업	33.0	25.8	9.2	21.7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2.4	1.4	5.2	3.3
건설업	10.8	14.0	15.2	13.4
도매 및 소매업	5.4	4.6	2.7	4.1
숙박 및 음식점업	2.7	3.0	3.1	2.9
운수창고업	3.2	3.5	2.4	2.9
통신업	2.6	2.2	1.9	2.3
금융 및 보험업	6.0	4.5	4.4	5.0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업	11.0	7.2	5.9	8.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11.0	20.9	13.7
교육 서비스업	6.2	6.4	5.9	6.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8	3.0	2.0	2.5
기타 서비스업	4.1	3.3	3.7	3.8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산업부문별 생사약이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백분비를 집계함
 2) 강조 표시는 타 유형에 비해 뚜렷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임

2. 충남지역의 지역 간 불균형 현황 및 문제점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06~2020)에서는 충남도내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제시하고 있다(송두범, 2007).

첫째, 도시성장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서북부권 도시의 성장과 전통도시의 침체로 지역·도시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신산업지대가 형성되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지역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는 성장하고 있으나, 기타 도시의 인구는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어 도시 간 인구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통망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경부

축선상을 따라 지역이 개발되어 저농산업중심의 내륙 및 서해안지역의 도시가 침체되고 있고, 현재 당진-대전고속도로가 개통되었지만 그동안 충남도내 동서지역 간 교통체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저개발도시의 정주·생활여선이 미흡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중소도시의 중심지기능이 약화되고,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들이 중심지 기능과 역할이 미약하여 대다수 시군청소재도시의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읍·면급 도시의 중심성은 더욱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전, 천안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의 입점이 인접한 주변 중소도시의 상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셋째, 지역 간 생활기반 여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충남의 평균규모 농촌지역(2,500~5,000명)과 소규모 농촌지역(2,500명 미만)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생활환경의 낙후로 먼 중심지 기능이 쇠퇴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농촌지역은 과소농촌지역과 근교농촌지역으로 발전의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농경지면적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영농형태로 전통적 쌀농사에서 충남서북부지역(아산, 당진, 천안 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연기, 공주 등)을 중심으로 특용작물, 축산, 채소, 과수 등의 근교농업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북부권 중심의 산업집적 강화로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도내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집적을 보이고 있는 곳은 천안·아산·서산 등의 북부지역이고, 제조업체 수의 증가율도 서산(8.1%), 천안(5.6%) 등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산업집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내륙지역인 부여군과 공주시 등의 지역은 사업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역 내 제조업 생산액이 낮은 지역은 보령시(0.8%), 부여군(0.9%), 청양군(0.8%), 홍성군(0.5%), 태안군(0.1%), 계룡시(0.1%) 등으로 대부분 서해안의 관광산업 중심지역이거나 내륙의 농축산업 중심지역이다.

여섯째, 문화시설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충남 전체의 문화 시설 중에서 천안시와 공주시에 약 30%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 문화시설수가 상대적으로 과소한 시군은 계룡시, 청양군, 태안군 등으로 문화시설 인프라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시군별 의료 수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종합병원 등은 대부분 도시지역(시부)에 집중되어 있고, 군부는 대부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기반의 시군 간 격차가 비교적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차등지원 분류시안을 마련한 공청회(2007.9)에서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적용하여 발전정도를 평가하여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역분류에 따라 지방기업 법인세의 차등감면, 기업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기업부담분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하였다.

충청남도는 낙후지역에 6개 군, 정체지역에 7개 시·군, 성장지역에 3개 시가 포함되었으며, 발전지역에서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충남지역 지역분류(시안)

구분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연기군, 태안군, 당지군		-
시	-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방안 공청회자료, 2007.

Ⅲ. 공간계획 및 정책에서의 충남지역 현황분석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 기조와 방향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의 기조중 하나는 지역별로 특성 있는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고, 지방분산 및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개방형국토축의 형성이다. 또한,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형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상생적 발전체제 구축 등 상생하는 균형국토가 목표중의 하나이다. 특히, 국토구조에서 다핵연계형 국토구조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공간구조 개편에 있어서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국토공격을 근간으로 광역개발 추진과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한다는 기조를 담고 있다.

충청남도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인접도시간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을 설정하고, 10대 광역권중 하나인 아산만 및 대전·청주 광역권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자정보기기 등 4대 전략산업 육성 백제문화권·내포문화권의 문화관광특정지역 개발 및 육성, 간선도로망 및 간선철도망 확충,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이 주요계획으로 제시되어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이전이라는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건설,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즉 지방분산과 지방정부로의 분권,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5+2 광역경제권 발전의 구상을 제시하며,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사업인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재검토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는 차별성을 보이는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김선미, 2008).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핵심과제 중 지방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분야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 민간자율·창의에 기초한 시장중심 투자여건 조성과 감세, 규제개혁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의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를 위한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책 역이

이 큰 틀 안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 친화적 균형발전을 의미한다. 즉 수도권과 지방이 똑같이 시장경쟁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효과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부터 국정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수도권 규제개선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을 주요 업무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변창흠, 2008).

이명박 정부의 3대 공간전략은 4대 초광역권 벨트, 5+2의 7대 광역경제권, 그리고 163개의 시·군을 공간 범위로 하는 기초생활권 정책이다. 초광역개발권이 국가주도로, 광역경제권이 시·도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메가 프로젝트로서 효율성 위주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권역인 반면, 기초생활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 단위의 정주 및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계획권역이라 할 수 있다. 기초생활권은 생활여건과 경제여건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정책 영역이다. 기초생활권은 소규모의 생활형 사업에 중점을 두어, 주로 인간 정주에 필요한 생산, 생활, 여가, 교육, 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며, 주로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사업이 투입되게 된다.

충남지역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 기초와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5+2 광역경제권

광역권개발계획은 지방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경제권과 자족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의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 내에서 자립경제가 가능하도록 산업, 주거, 교육, 휴식공간과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기능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장기종합계획이다.

광역권 개발계획은 지역균형개발과 지방분산형 국토공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10개의 광역권을 지정하였다.

충청남도에는 청양군·홍성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대전·청주권,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등 3개의 광역권과 전부 또는 일부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

<표 7> 광역권 개발계획에서의 충청권의 계획개요

구분	면적(km ²)	인구(만명)	행정구역	수립시기
대전·청주권	6,768	260	공주, 계룡, 연기, 금산, 논산(일부)	1998. 12
군산·장항권	3,100	112	보령, 부여, 서천·논산(일부)	1999. 12
아산만권	3,517	126	천안, 안산, 서산, 당진, 예산, 태안	1994. 12

자료: 건설교통부, 2003~2005 건설교통백서, 2006. pp.145~147.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5+2 광역경제권을 국가균형발전 구상으로 제시했다. 광역발전구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지방간 경쟁으로 빚어진 제로섬게임을 해소하고 상하이 등 중국의 경제거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경제권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도입이유이다. 광역경제권 구상은 전국 16개 시도를 5개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강원특별경제권, 제주특별경제권)으로 묶고 광역경제권마다 기획조정, 재정권을 가진 '지역본부'를 둬으로써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 구상의 6대 발전전략으로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광역경제권 기간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특히 지방정부는 관련 발전보조금 및 교부세를 지원하며, 입지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 자치단체별로 공장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권역별 구상 내에는 필요한 지역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권 구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관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정연정, 2008).

조명래(2008)는 수도권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 집중이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지방광역경제권은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거나 협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이 점에서 광역경제권의 도입은 '수도권의 쓰나미 효과'를 낳아 비수도권의 상대적 침체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2) 과학비즈니스 벨트

이명박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의 국정지표를 위해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신성장 동력확보의 핵심과제로 세계화로 이끌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기획단이 해체되고, 관련 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이 표류하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덕특구, 행정도시, 오송·오창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 벨리로 육성한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에 충남도는 대덕특구의 거대복합연구시설을 기반으로 한 R & D 역량과 인프라에 세종시의 행정기능,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 연기 금남의 생산물류기지 기능 등 핵심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충청권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자체가 표류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 입장에서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을 향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서해안 시대 및 동북아 시대의 성장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정에서 정부의 정책혼선과 표류, 변질은 충남도의 정책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김선미, 2008:152-153).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기능의 일부가 솔선하여 지방으로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고 문화·교육·국제교류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균형발전정책을 선도하는 핵심 정책 사업이다.

2005년 제정·공포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적 72.91km², 인구 50만명(2030년)규모로 2030년 완료계획으로 건설 중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12부 4처 2청과 그 소속기관 등 총 49개 단위행정기관이며, 2012~2014년 연차별로 이전할 계획이다. 2007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을 시작으로 7천 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첫 마을 사업이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충청남도에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연기군과 공주시 5개면, 주변지역에 연기군과 공주 7개면이 포함되어 있다.

<표 8>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

구분	예정지역면적(km ²)	주변지역면적(km ²)	비고
계	73.14	223.77)	주변지역에는 청원군 33.42km ² 포함
연기군	68.24	118.62	
공주시	4.9	71.73	

자료: 행정복합도시건설청, 200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2006. 2.

그러나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축소와 수정(안)에 대한 정책변경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중심’은 빠진 채 ‘세종융합도시’라는 명칭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모호한 성격규정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재검토하고 기업과 과학도시로서의 개정(안)의 성격 변화의 가능성을 현 정부에서 비치고 있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의구심을 더한다. 이러한 행정도시 건설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면 충청권의 구체적인 실시수립계획과 연계발전계획도 늦추어지게 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4) 특정지역제도

특정지역제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특정지역종합개발을 위한 특별조치법(1980)’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나, 1994년 ‘지역균형개발 차 지방중소기업 육성이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구 특정지역제도에 의해 12개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되었으나, 11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종결 또는 해제되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현행 특정지역제도는 국토를 광역권개발과 개발촉진지구만을 개발하면서 중간지역에 대한 개발이 곤란하여 광역권과 개발촉진지구와 보완적 관계에 있으면서 차별성을 가진 새로운 지역개발제도로 특정분야의 육성과 자원을 위해 도입하였다.

충청남도에는 구 특정지역제도하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과 현행 특정지역제도하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등 2개 권역이 지정되어 있다.

<표 9> 특정지역 지정현황

구분	지정일(사업기간)	지정범위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1993.6.11 (1996~2010)	충남, 전북일부 (1,915km ²)	총 55개사업 (2조 7,283억원) - 문화유적, 관광, 도시환경, 교통시설, 계룡지역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1994.12.9 (2004~2014)	충남임원 (955km ²)	총 46개사업 (1조 505억원) - 정신문화, 문화유적, 관광휴양, 기반시설

자료: 건설교통부, 2003 ~ 2005 건설교통백서, 2006. pp.157 ~ 158.

5)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시책으로, 총409개의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소재한 345개 중 170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예정지인 충청남도와 대전청사·대덕 R&D특구가 소재한 대전시를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되, 이전 대상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대환·연구소·산업체·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10곳에 혁신도시건설이 확정되었다.

충청남도에는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국토특수교육원 등 6개 기관이 개별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

<표 10> 충남으로의 개별이전 공공기관

(단위 : 명)

구분	본사인원 (정원/현원)	이전 예정인원	이전지역	이전여부
한국서부발전	227/241	211	대전	확정
한국중부발전	227/242	227	보령	확정
국방대학교	-	576	논산	확정
경찰대학	262/260	262	아산	확정
경찰종합대학	-	-	아산	확정
국립특수교육원	-	-	아산	확정

주 : 경찰종합학교 및 국립특수교육원은 본사인원 및 이전예정인원자료 미확보

자료: 건설교통부 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2005과 최근관련자료를 기준으로 재작성.

6) 기업도시 건설

기업도시는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택가격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안한 바 있고, 2004년 6월 건설교통부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정식 건의하여, 동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확정되었다.

동법에서 기업도시는 제조업, 관광산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주도로 개발되는 도시로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 제 도시기능을 갖춘 자족적 복합기능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는 기업이 필요한 곳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하여 기업주도로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욕을 고취하고, 정부입장에서는 양호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정부지원의 확대를 종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2005년 7월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2005년 8월 태안(관광레저형), 영암·해남(관광레저형)이 선정되었다.

충남 태안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건설되는 태안기업도시는 14,624천㎡의 면적에 2011년 완공 목표로 건설되며, 주요도입시설은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아카데미, 웰빙공원, 첨단복합산업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즈니스단지, 농촌체험관형 관광단지 등이다.

<표 11> 태안기업도시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면 B지구 일원
규모	14,643천㎡
인구	1만 5,000명
총사업비	9조원(직접투자 2조 2,000억원, 외부투자 6조 8,000억원)

7) 기초생활권 계획

광역경제권의 모세혈관 연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 재생이야말로 광역경제권 발전의 기초이자 필요조건이다. 기초생활권 정책은 지방분권적·지역 통합적 개발의 근간인 동시에 광역경제권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상호보완적 정책이다.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자칫 소외될 우려가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대도시를 제외한 163개 기초 지자체(자치구 제외)를 대상으로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휴양 거점화, 지역연고자원의 2·3차산업 융합 등 소득·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한다. 또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단일 시·군이나 혹은 다수의 시·군이나 혹은 다수의 시·군을 모두 기초생활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기초생활권은 지역의 위치적 특성, 도시와의 통합성, 발전 정도 등을 반영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기초생활권 정책의 가장 큰 의의는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종합적·통합적 발전 기회를 모색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지역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송미령·김정섭·박주영, 2009:423-427).

기존 지역정책은 유사·중복적인 성격과 내용의 소규모 단위사업추진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적지 않았으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예산 따오기’ 경쟁에 치중하느라 지역 개발 역량을 내실 있게 형성하는 데 소홀했다. 급변하는 시대적 수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기획해 놓은 단위사업 지침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기초생활권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지역정책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자체 자율적으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기초생활권 개발의 계획적·체계적 투자를 유도하며, 시장·군수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는 계획 수립 매뉴얼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둘째,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특성화된 개발을 추진토록 한다. 셋째, 정주인프라, 산업, 문화, 교육, 복지 등 기초생활권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되, 지자체 자체사업 및 군특회계 보조사업 이외 해당 교육청 초·중·고등교육 관련 사업도 연계한다.

이러한 기초생활권 정책은 시·군 기초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아직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막연해 하고 있다.

<그림 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범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범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7개 분야 21개 사업군 포괄보조금외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세/교부금)
문화 관광 체육	농림 수산	산업 중소 기업	보건 복지	환경	수자원 교통	기초 생활 기반 구축	일반행정, 문화환경, 사회복지, 경제개발 등
지자체 예산의 10~20%							

2. 중앙부처의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분석

‘삶의 질 특별법’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FTA의 확산과 세계무역기구 농산물협상의 진전으로 농림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및 농림어업인의 삶과 관련하여 기존에 개별적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던 법들의 상위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2004년 3월에 제정되었다. ‘삶의 질 특별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산림기본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농·산·어촌의 구분에 따라, 혹은 특정 부문에 대하여 개별적 법령이 마련·지원되던 형태로부터 지역간 및 부문간 통합적 지원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 법령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 및 식품을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고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기 위한 사업시행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을 개성 있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 의해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촉진에 고나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의 개별 법들이 있다. 낙후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지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표 12>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정책체계

정책유형 \ 판단기준	주관 부처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공간 범위	지역 성격	사업 성격	지구 지정 여부	지역 중복	재원 조달	자치 사무 성격
신활력사업	행자	4	◎	◎	나	A	○	○	C,a	A
접경지역사업	행자	1	○	◎	가	B	○	○	B,b	B
오지개발	행자	1	○	○	가	C	○	○	B,b	B
도서개발	행자	1	○	○	가	C	○	○	A,b	B
소도읍육성	행자	2	○	◎	나	A	○	-	C,a	B
개축지구	건교	1	▽	◇	나	C	○	○	C,b	B
농촌마을종합개발	농림	2	○	▽	나	A	×	○	C,a	A
정주기반확충	농림	1	▽	○	나	C		○	C,b	B
전원마을조성	농림	1	○	▽	나	C	×	-	A,b	A
녹색농촌체험	농림	4	☆	▽	나	B	×	○	A,b	A
농촌진통테마	농진	4	☆	▽	나	B	×	○	A,b	A
어촌체험관광	해수	4	☆	▽	나	B	×	○	A,b	A
어촌종합개발	해수	1	▽	▽	나	C	×	-	C,b	A
산촌종합개발	산림	1	▽	▽	나	C	×	○	B,b	A
문화관광자원개발	문광	3	☆	◇	나	B	×	-	C,b	B
농촌생활용수개발	농림	1	◎	▽	나	B	×	-	B,b	A
농어촌주거환경개선	행자	1	▽	▽	나	B	×	-	B,b	A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환경	1	▽	▽	나	B	×	-	B,b	A
단위시설사업	각부처	1	▽	◇	나	A	×	-	A,a	A

- *사업 목적 : 1 생활기반조성, 2 복합적 종합사업, 3 자원개발, 4 소득창출
- *사업 내용 : ◎향토자원개발 및 활용, ◦ 정주기반+소프트웨어, ▽하드인프라공급, ☆관광·도농교류
- *공간 범위 : ◎시·군·읍, ◇지구, ◦면·동, ▽리·마을
- *대상지성격: 가 특수낙후지역, 나 일반낙후지역
- *사업 성격 : 자치단체 계획수립집행 자율성 - A 강, B 중, C 약
- *지구지정여부 : ◦ 법률에 지구 지정, × 부처가 사업대상 선정
- *지역 중복 : ◦ 가능, - 사례없음,
- *재원조달 : A 소규모(5억이하), B 중규모(6-20억이하), C 대규모(21억이상); 포괄성 a큰, b작음
- *자치단체 고유사무성 : A 강, B 중, C 약

1) 개발촉진지구사업

개발촉진지구 제도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구나 산업의 지방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충청남도에는 총 6곳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와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는 균형개발촉진지구, 청양군 등 4곳은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표 13> 충남의 개발촉진지구 선정 현황

구 분	사업기간	면적(km ²)	주요산업	투자비(억원)	유형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1998 ~	29.82	·아산신도시개발계획에 포함		균형개발형
백제문화권	1993~2010	1,915	· 5개 부문 43개 사업	22,778	균형개발형
청양군	1996~2003	150	· 칠갑산, 백제문화권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을 통한 체재형 관광유도 및 지역특산물 개발	1,947	낙후지역형
홍성군	1997~2005	150	· 임해관광도로 개설, 굴새우젓촌 등 지역 특산물을 육성·개발	2,961	낙후지역형
태안군	1999~2003	126.4	· 체험어장, 오토캠프 등 해안관광개발,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특산물 육성개발	10,905	낙후지역형
보령시	2001~2005	150	· 폐탄광 이용 및 관광자원, 농특산물,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1,555	낙후지역형

자료 : 건설교통부, 2003~2005 건설교통백서, 2006, pp.150~152.

2) 신활력사업

신활력사업은 2004년 7월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에서 제시된 비전인 농산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도농상생’의 균형발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혁신역량강화, 고부가가치 6

차산업창출, 도농간 활발한 교류·협력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낙후지역개발정책이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기로 나누어 최대 9년간 지원되며 1기(2005~2007년)에는 전국 70개 시군에 대해 국비 5.782억 원을 지원하였고 매3년마다 평가를 거쳐 2기(2008~2010년) 대상시군을 선정하였다. 충청남도는 1기에 3개 군이 선정되었으나 2기에 금산군이 탈락되고 신규 4개 군 등 6개 군이 선정되었다.

<표 14> 충남의 신활력지역 선정 현황

구 분	대상 시·군	비 고
제1기(2005~2007년)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제2기(2008~2010년)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금산교체

3) 소도읍 육성

2001년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관련 지침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2003년부터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지방소도읍의 지역경제 활력과 도시기능 확충,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도읍육성사업의 주요내용은 ①국고지원 ②26개 법률에 의거, 각종 인허가 의제 처리③토지수용(민간사업자의 경우 개발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 허용) ④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 무상양여 ⑤적용의 특례(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등) 등이다. 충청남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9개 소도읍을 대상소도읍으로 선정하였었다.

<표 15> 충남의 소도읍육성사업 현황

구분	대상읍	주요내용	사업비 (억원)
2003	금산군 금산읍	인삼·약초산업의 메카, 인구 4만의 건강수도	504
	홍성군 홍성읍	전통문화와 청정환경을 살린 새롭게 도약하는 문화·환경 도시	206
2004	공주시 유구읍	전통사업 활성화를 통한 유구자카드 르네상스	293
	논산시 강경읍	젓갈산업의 메카, 근대역사 경관의 관광도시 육성	232
	태안군 태안읍	해양과 내륙관광지를 연계 지원하는 허니포트형 거점관광도시육성	362
2005	-	-	-
2006	부여군 부여읍	백제문화의 깊이·넓이·다양함을 느낄 수 있는 격조높은 백제문화도시	240
	청양군 청양읍	청정농산업과 그린투어리즘의 메카	121
	서천군 장항읍	산업,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활력거점	125
	당진군 당진읍	서해안관광기능을 수행하는 충남서북구 거점소도읍	195

4)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중앙정부주도의 지방지원정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는 등 한계가 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지방의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과제를 선정하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적인 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지구 등에도 지정이 가능하고, 1개 기초자치단체내 2개 이상의 지정도 가능하다. 지역특구는 규제특례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중앙재정지원은 없으나, 특화사업재원은 지자체 자체 재원이나 균특회계를 이용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규제의 특례적용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7년 9월 30일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아산시, 금산군, 논산시, 청양군 등 7개 시·군에 9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표 16> 충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구 분	특 구 명 칭
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논산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논산 양촌곶감특구, 강경 발표곶갈산업특구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특화산업특구
예산시	예산 황토사과특구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태안군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3. 중앙부처 낙후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중앙정부는 권한과 자원의 독점을 통하여 급속한 총량적 성장을 이뤄냈으나, 그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은 크게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이제 불균형 성장전략을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정부기능의 집중은 국가 중추행정과 관련이 있는 기능과 업체들의 집중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결과를 나타내 국토공간상 불균형발전을 유발시켰다.

즉,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는 지방 육성을 위한 재정 및 자원의 배분이 인색한 상태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같은 분권화정책이 미온적으로 추진되었고, 또 지방의 적극적인 육성보다는 수도권 집중억제에 중점을 둔 소극적 규제정책을 펼침으로써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충청남도, 2008).

또한 그 동안의 국토정책은 국토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효율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수립·시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개별 산업계획 등도 이러한 기조를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가져오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급격한 도시화도 도시지역 내부에는 성장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지가폭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였으며, 반면에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세수의 감소와 함께 시설들의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되어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다시 농어촌 지역의 인구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누적된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문제는 농촌문제의 동시적 접근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채 시행된 도시문제 해결 위주의 정부정책의 산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부처별 균형발전사업의 문제점도 다음과 같이 제시 될 수 있다(국토연구원, 2008; 충청남도, 2008).

1) 낙후지역정책기반의 부재

각 부처별 필요에 의해 낙후지역개발사업을 개발·시행함에 따라 성격이나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많고, 낙후지역개발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성도 떨어진다.

부처별 지역개발사업을 규정하는 법적기반도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통합법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법제의 미비는 부처별 사업의 생성, 난립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은 농촌지역에 속하는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낙후지역의 개념은 농촌과 이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농촌과 중복되는 지역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농촌과 낙후지역으로 구분된 현행 지원사업 체계로 인해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중복성이 확대되게 된다. 즉, 같은 대상지역에 농촌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업과 낙후지역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업이 투입되는데 이루어지는 사업목적과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기준으로 하위 몇 %를 낙후지역으로 설정하고, 별도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과 효과 평가를 위해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현행 낙후지역 개념은 유지하더라도, 선정된 지역에 별도 단위사업으로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2) 계획수립·집행주체의 다원화 및 분산개발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사업주관부처가 7개 3개 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46%), 농촌진흥청(12%), 문화체육관광부(10%),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9%) 등이다.

낙후지역의 개발정책에 대한 부처별 수평적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추진단위도 사업별로 읍·면, 마을·지구, 개별사업 등으로 제 각각 달리하고 있어 사업의 공간적 위계와 기능적 연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진주체들이 각각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투자 우선순위의 왜곡이나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될 소지가 많다. 이로 인하여 분산투자, 중복투자로 인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는 한계가 나타

난다.

(3) 하향적 계획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족

사업추진방식을 살펴보면,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56개 사업이 중앙정부 선 대상지 선정방식에 따르고 있다. 공모방식은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반 공모방식으로는 7개사업, 제한적 공모방식으로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로 중앙이 사업내용, 사업방식, 사업지구 선정 등에 관한 계획 또는 지침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사업물량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단순구도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이나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발구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드웨어 사업보다 소프트웨어 사업이 필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지만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적 계획체계가 문제시 되고 있다.

(4) 예산지원의 포괄성 결여 및 지방비 부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재정은 2005년의 경우,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사업 4조 2천억원 가운데 낙후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23.6%인 9,917억 2천여만원에 불과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재원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이러한 재원도 중앙부처의 여러 사업에서 나누어주기 식으로 소규모로 분산적으로 지원되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부처사업들이 매칭펀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낙후지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이는 낙후지역 중 지역경제가 취약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투자는 물론이고 국비지원에 상응하는 지방비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한다.

IV. 충청남도 지역균형개발시책의 주요사업내용

1. 충남의 핵심과제 및 주요사업계획

민정 4기의 충청남도는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도정기조로 삼아 균형 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 있는 농어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건강한 자연환경을 통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건설하겠다는 도정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행정도시건설,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기존의 안주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성과주의 행정 강화를 통한 강한 충남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전략목표로 행정도시·도청신도시로 신성장 동력창출, 도내 1시간 생활권기반구축, 농·수·축산업의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미래성장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육성, 사랑과 희망의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 자연환경 지역통합 네트워크 구축, 재해·재난 예방으로 도민생활 안전 확보, 인재육성 및 U-충남으로 활기찬 미래준비, 성과중심의 신경영행정을 추진하였다.

현재 충남은 행복도시, 도청신도시, 백제문화재현단지, 황해자유무역단지 등 4대 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토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 중추 기능의 집적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토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서해안 거점 항만 조성으로 황해경제권의 주요 교류거점으로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국 교역과 서해안의 역할 증대와 함께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거점으로 부각시킬 전망을 가지고 있다. 충남 서해안을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서해안권 종합발전 구상’, ‘연안권 발전 특별법 착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구상에는 보령신항과 보령 관창산업단지, 태안기업도시, 장항선 철도 개량, 안면도 관광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보령-안면도간 연륙교 등 서해안권의 핵심사업과 서산 민항기 취항, 원산-외연도 관광지 개발, 보령 영보산업단지 등 신규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망라된다. 이미 황해자유무역단지가 결정되었고, 대덕R&D특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이 가시화되고, 청주공항, 당진·평택항, 탕정단지, 오송·오창단지 등 산업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비약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일원, 경기 평택시, 화성시 일원이 중심이 되어 충남도와 경기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첨단산업단지와 국제물류, 관광, 연구 단지 조성, 당진군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당진군의 시 승격과 맞물려 비약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충남의 서북부지역 발전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으로는 7조4천억 원 투입, 5천 505만㎡, 생산유발액 11조 940억원, 6만7000여개의 일자리와 4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도청신도시의 경우,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청이전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청신도시 건설은 기존의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이 아닌 충남도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심도시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비전과 미래 지향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과 함께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투자유치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충남도의 현안이나 과제들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과 맞물릴 때 수도권인접지역으로서 부정적 파급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추세로 미루어보아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인접지역인 충남도에 유입되는 자본과 기업의 매력적 요인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주변지역으로 전략할 가능성도 높다.

<표 17> 충남의 핵심과제 및 주요사업계획

핵심과제	기본방향	주요사업계획
행복도시 연계권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및 도시기능 체계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계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 ○ 기능연계의 강화를 위한 교통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계 도시권의 기능 체계구축 - 스마트 산업집적지구 - 주요 도로(Corridor) 및 IC연접부(Smart IC) 개발사업 - 전원주택지 개발과 네트워크형 기존취락 정비 사업
금강 연합도시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전북권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개발 유도 ○ 전통문화 콘텐츠의 창의적 활용방안 모색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신개념의 도시권역인 어반클러스터 형성 ○ 충남, 대전, 충북, 전북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수계 하천환경 및 경관조사·분석 - 치수 및 수환경관리 - 하도정비 및 주운 - 둔치활용 및 기타시설 설치 - 금강수계권 관광자원화 - 종합물류기지 조성 - 한반도 중남부권의 중추거점으로 육성 - '금강 테마관광벨트' 관광상품 개발
중소도시 도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역과 외곽 신시가지와의 기능적 분담 및 조화 ○ 핵심사업의 선정 및 단계별 시행 ○ 도심지역 활성화를 촉진 및 지원하는 법률 제정 ○ 실현가능성이 높은 도심활성화종합계획의 수립 ○ 도심관리조직의 육성 및 시민합의 기반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 특화거리 정비사업 - 청소년 문화의 거리 - 걷고 싶은 거리 - 상점가 특화거리 - 공공시설 이전적지 사업 - 도심기반시설 확충사업 - 도심환경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 역세권 개발사업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육성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도시 ○ 통합형행정도시 ○ 건강복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형 행정도시 - 지식기반형 첨단산업도시 - 고품격 건강복지도시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 정보화 기반의 유비쿼터스 도시 - 각종 재난 및 재해에 안전한 도시건설
환황해권 경제중심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로써의 경제 중심지 ○ 지역문제를 넘어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수단으로써의 환황해권 경제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초광역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 아산만권 첨단산업단지 조성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충청남도는 도내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2007년 3월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에 ‘충청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내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

전사업을 추진하였다. 충남 균형발전 기본계획에는 균형발전 대상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자산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역동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지역고유의 잠재자원을 기반으로 개성 있는 지역문화 창출, 도시적인 편리성과 전원적인 쾌적함이 조화를 이루는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충청남도, 2008).

<표 18> 충청남도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

시군별	발 전 방 향
공주시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상생발전 하는 스마트 시티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의 중추도시 -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아름다운 관광휴양도시 - 지속가능성, 능률성, 쾌적성, 첨단성이 확보된 SMART CITY
보령시	○ 글로벌 보양도시,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휴양물류 허브 도시 -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휴양인프라를 기반으로 레저와 건강, 치유가 어우러진 복합관광 지향 - 향토자원과 전통문화를 보양산업과 연계 육성
논산시	○ 도농복합형의 자족형 전원도시 조성 -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이 복합된 충절과 예학의 테마도시 - 도시 및 농촌이 함께 상생발전 하는 친환경 정주도시
금산군	○ 글로벌 생명·휴양·전원도시 조성 - 인삼산업을 생명산업화로 지역산업의 기반강화 및 활성화로 경쟁력이 확보된 선진 도시 - 자연과 농산촌이 균형적 개발이 조화된 쾌적도시
부여군	○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관광의 글로벌 허브 도시 - 백제 역사문화 핵심의 문화·관광지역 -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 휴양지역
서천군	○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 - 환황해권의 세계적인 산업·교역의 중심도시 - 생태·경관·관광자원을 보유한 관광거점도시
청양군	○ 물, 산, 사람이 어우러진 에코 파라다이스 청양 - 도시적 편리함과 전원적 쾌적함이 조화된 전원도시 - 청정한 자연생태자원에 기반한 매력 있는 관광·휴양도시
태안군	○ 서해안 관광벨트의 국제적 관광수도 - 서해안관광벨트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적 해양관광 거점 - 도시적 편리함과 농촌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쾌적한 건강지대

V. 충남 지역균형발전전략 도출 및 추진방향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국가차원 및 충청남도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개략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부여군·서천군·청양군·태안군 > 공주시·보령시·논산시·금산군·홍성군 > 천안시·아산시·서산시·계룡시·연기군·당진군 등의 순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배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균형발전 시책은 충청남도내 낙후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내륙 및 금강유역,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국가 및 충청남도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시책은 공간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균형발전시책이 시·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제한된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군 전체의 지역균형발전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을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사업이 전개되는 지역 내에서 성공사례를 많이 산출하여 타 지역으로의 확산이 요구된다.

충남의 도·농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선미, 2008; 변창흠, 2008; 송두범, 2007;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 2008; 정환영, 2008; 차미숙 외, 2008;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1. 중앙정부의 지방정책과의 효율적 접목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책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충남권이 어떻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의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지방발전정책에 충청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충청도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국가정책과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은 없는가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충청도는 국가차원에서 수립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도종합계획에 순응하면서 ‘충남! 2020비전과 종합발전방향’을 확정한다. 충청남도를 ‘3×3의 田자형 지역발전축’과 ‘4대개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립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북부권 편중 구조에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다핵연계형 구조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수정계획은 지난 2001년 제3차 도종합계획 수립 이후 행정도시건설, 도청이전확정, 국가기간 교통망 변경, 환황해권 시대 개막, 주5일제 시행 등 지역 내외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특히 본 계획에는 평택~행정도시, 안성~행정도시, 보령~공주 간 등 고속도로, 도청 신도시에서 동서남북 축 고속화도로, 서해안관광산업도로, 충청선(보령~조치원)과 서해선(아목~예산)등 철도, 보령신항, 대산항, 장항항 등 SOC구축을 기반으로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계획, 남공주 역세권 개

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방산업단지 건설과 기호유교문화 유적정비, 한방바이오벨리, 한산 모시쿨플렉스 개발 등 도내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활력증진에 대한 충남도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러한 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보와 민자 유치 방안이 관건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조율은 물론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의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2. 시·군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인접한 시·군간의 연계·협력 촉진으로 규모의 경제화 및 지역개발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한다. 부문적으로 문화관광, 환경, 복지, 의료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사례로 충남 공주·부여 간 역사문화도시를 공동추진하여 백제문화제 등을 공동개최하거나, 인근시·군이 조합을 설립하여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통합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농축수산업 및 2·3차 산업의 공동마케팅사례로서 전남 보성·하동 등 20여개 시·군이 협력하여 차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과 같은 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환경 등 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시설의 공동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주시와 김포시의 소각장과 매립장 공동 설치, 구로구와 광명시간 생활쓰레기 및 생활하수 상호교환 처리사례와 경기도 이천시 광역소각장 건설시에 주민지원기금(130억원) 및 도로 확·포장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앞으로 시·군간 연계·협력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 2008:58-59).

또한 현재 광역자치단체간의 지역간·산업간 연관관계가 더욱 광역화 되고, 통합적인 경제활동 공간으로 개편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충청남도과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 중국 교역에 있어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평택·당진항을 동북아물류·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배후의 충남 및 경기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 및 수도권과의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 간 협력목표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한 자원 및 여건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를 설립하여 반관·반민 조직으로서 지역산업발전의 자율적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아산만권 첨단산업단지(충남·경기 상생단지)조성하여 충남·경기 상생의 취지에 맞게 양도 지역을 포함,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3. 지역특화산업과 전략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위주로 충청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이것은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이나 국책사업방향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충청남도 특화산업으로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사업, 농축바이오산업을 꼽을 수 있으며, 지역전략산업의 IT산업과 BT산업으로 특정지어지며, 산업간 기술적 연계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산업직적시설의 경우, 충청권의 총 52개 국가·지방산업단지 중 20여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입지해 있고, 산업단지 내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전자정보산업과 바이오산업, 벤처기업들이 집중 분포하여 있고, 주변에는 대덕 연구단지를 비롯하여 4년제 대학이 대전, 천안, 아산 청주시 등에 밀집되어 있어 고급인력과 기술을 상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천안·아산·당진 등의 서북부권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산업을 서산·태안·보령·서천 등의 서해안권은 자동차부품산업을, 예산·홍성권은 농업바이오사업, 서천·부여·청양권에는 백전문화관광산업, 공주·연기권에는 문화 및 행정서비스 산업을, 논산·금산권에는 설비 및 건강식품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균형발전대상지역으로서 1차산업 위주의 경제기반을 갖춘 지역은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 즉, 지역개발과 지역혁신이 양립하며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과 농촌개발이 어우러진 지역개발,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개발 등이 다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이 장기적으로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착, 문화적 공급의 기초가 되는 지역적 기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지역마다 차별화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향토자원의 개발·지원하기 위해 농·산촌 특화자원, 폐교 등 기능상실 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문화·역사·테마·레포츠·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하며, 향토성 있는 관광·이벤트 사업의 기획·개발과 지역의 전통과 여건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4. 낙후지역개발정책의 통합 추진

낙후지역 정책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낙후지역 개념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 상태이다. 이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뜻하는 기존 낙후지역의 개념을 ‘경제적 여건이 침체된 지역’의 의미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낙후지역 선정을 지역발전수준과 재정역량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분석을 통하여 기초역량, 행정·주민역량, 산업경제역량, 생활여건역량 등을 비교평가하여 이 중에서 기초역량(인구부문, 재정부문)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별 수준을 평가하여 낙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내용과 대상지역 등이 유사한 사업을 묶어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정책의 패키지 지원 및 교부세의 특별 지원 등 특례조치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야만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충청남도 도정백서를 보면 충남지역의 개발과제로 혁신거점 신도

시와 신시가지 개발, 아산만광역권 지원 중심도시, 산업지대 활성화 등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신도시 신시가지 선설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등 여전히 신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개발에 대한 비중은 충남권역 내의 불균형의 원인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권역 내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내 낙후지역에 대한 산업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회생을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서비스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주거, 환경 등 생활서비스의 거점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부족의 유형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삶의 질 측면의 거점지역을 설정하고 거점지역에 대한 삶의 질 요소를 보강하는 정책을 개발, 추진하도록 한다. 더불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창조지역만들기, 어메니티 증대사업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관련 시책을 개발한다.

5. 기초생활권 정책에 대한 충남 지자체의 대응방안

이제 기초 생활권별로 변화된 정책 환경 하에서 보다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전략을 누가 어떻게 수립하여 실행할 것인가 하는 도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미래의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충남도와 지자체는 농어촌 기초생활권 정책에 대응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미래 전망에 있어 차이가 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인구 과소화, 농어촌 중심지 기능, 지역사회 구성원 변화와 일자리 종류 등에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① 도농연계형 기초 생활권은 도시 인구 및 도시 산업의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으로 어떻게 도시와의 공생, 협력을 통해 지역을 재생시킬 것인가가 보다 중요하다.

② 농산어촌형 기초 생활권은 심화되어 가는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 문제의 해결, 소멸하지 않으나 더욱 축소되는 마을들에 대한 기초 서비스 공급,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산업화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확보와 연계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현안이 될 것이다.

그간 시·군 기초생활권은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단위사업별 지침에 충실하게 집행을 대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정책 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필요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송미령·김정섭·박주영, 2009:446-449).

(1)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현을 전제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 요청된다.

기초생활권 정책은 시·도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계획을 승인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7개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 될 것이다. 7개 부문 중에서도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는 농촌적 자원을 활용해 소득기회를 제고시키는 일과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재정적,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 기초생활권의 가장 큰 현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문이 정주 및 경제 여건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7개 부문에 대한 재정자원 배분은 중앙정부와 소관 부처별로 제시할 예정인 사업별 최소한의 전략적 규모를 제외하고는 기초생활권의 재량이다.

(2)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역 현실 진단과 미래 전망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현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베이스 라인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 5년 내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 범위내의 사업을 구상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기초생활권 계획은 임시사항이지만, 포괄보조금 사용에 따른 성과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 정책 추진방식을 새로운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중앙정부 부처나 기초생활권 모두에서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농어촌 기초생활권별로, 7개 부문별로 성과를 확실히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모든 마을이 아닌 지속가능한 '마을'에 대한 투자의 선택과 집중, 모든 읍·면 소재지가 아닌 2~3개 중심지 육성, 모든 품목이 아닌 특정 전략산업 집중 투자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한 성과지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계획 수립과 집행, 성과 관리 등을 함께 할 지역 내외 주체를 확립하고 교육과 학습을 본격화 해야 한다.

농어촌 기초생활권의 경우, 인적자원의 양적·질적 부족으로 도시형 기초생활권에 비해 주체 확립이 어렵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적자원 유치에 주력하되, 당장은 ① 지역 내 인재들을 발굴하여 조직화 하고, ② 그 조직과 공무원 조직이 함께 교육 및 학습훈련에 돌입하며, ③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정부 부처, 지역외부의 대학교·연구기관 등 전문가와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④ 모의 사전 계획 수립 등에 미리 착수 할 필요가 있다.

(4) 시·군 기초 생활권이 지역의 현실 진단과 미래 전망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구상하여 집행하며, 성과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자율적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초생활권별 기획 역량과 출발점(baseline)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초생활권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청된다.

(5) 지방정부는 인근의 자치단체와 공동협력하는 사업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 큰 매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관률, 2009).

6. 도시재생 및 구도심활성화

대전, 천안을 제외한 대부분 도시들을 역이나 간선도로를 따라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상업기능과 공공행정기능들이 도시의 주요 기능으로서 중심지를 이루어 왔으나 인근에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공공행정기능이 이전하고 주변에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중심지가 쇠퇴하고 구업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게 되었다.

교외의 신도심 개발이나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은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보다는 구도심 지역에서의 인구이동이나 지역 내의 인구이동에 의해 진행되며, 신도심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이나 구도심지역은 인구감소와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적 활동으로서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형성 등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며, 기존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다. 선진국의 경우 도심활성화를 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및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 상권활성화지구 설정, 상징 기념물 건축 등을 통해 구도심을 대상으로 사회·경제·문화 활동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충남은 구도심의 쇠퇴 양상과 원인에 입각하여 도심의 쇠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기능의 활성화와 쾌적성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모색함으로써 구도심지역이 지속적으로 해당 도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구도심지역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나 건축물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을 통해 신시가지와 구별되는 중심상업, 업무기능, 문화, 관광 기능의 중추관리기능의 중심지로 개발하며,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차별화, 전문화 등의 추진을 통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 일대의 각종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전적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정비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한다.

7.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창의적·자율적인 추진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적·창의적 사업 추진이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검증하여 자구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자율적 기획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을 받아 시행할 수 없다면, 개별적 사업들을 연계하거나 규모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협력·조정능력이 필요하다. 현행 세분화된 사업단위의 분산형 지역개발시스템에서 지역단위의 통합적 지역발전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단위시설 및 인프라 위주의 개발에서 소득 및 고용 창출과 역량 제고 및 구조개선을 지향하는 발전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창의적·자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의 균등배분하는 개발방식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고 자발적인 의지가 강한 지역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충만한 지역에 대해 적극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이 자생적인 역량을 배양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한다.

VI. 결론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중심으로 충남도의 발전과제와 정책의 효율적 접목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충남도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제까지 추진되어 왔던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충남권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지방발전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둘째, 새 정부의 광역발전전략과 연계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충남권의 발전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중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 촉구 및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및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역역량강화와 비수도권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정부정책을 끊임없이 견인해 가야한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개발확대를 통해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경우 결국 수도권이 팽창으로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해진다.

셋째, 충남도 자생적인 경쟁력 제고와 발전 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전략계획은 권역 내 다른 개발계획(교통, 관광, 도시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보조금 삭감에 대비해 자생력, 경쟁력 제고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본과 투자 유치, 지방세 확충의 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충남도에서의 균형발전도 모색해야 한다. 소외지역이나 낙후지역 없는 균형발전이야말로 지방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간 협력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정비 및 새로운 교제시스템 구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발전계획은 ‘도시 경쟁력’강화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도시권의 도시경쟁력은 도시 내의 기업이 지닌 생산성뿐만 아니라 투자자본과 전문 인력 등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의 역량, 삶의 질 제고나 어메니티 증진, 지속적인 인간개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경쟁력은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많은 도시들이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경쟁력 전략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도시비전의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당국, 민간단체, 전문가 그룹이 함께 도시를 진단하고, 향후 도시발전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는 도시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시의 시장성과를 진단하는 성과지표 및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등의 구체적인 지표관리를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충남의 도·농간 지역격차를 실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격차, 생활서비스 격차(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의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지역간, 도·농간 격차의 분석과 진단을 통해 균형발전의 정책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목표와 방향에 따른 성과도 판단할 수 있기에 기초생활권의 정책현황, 지역 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가용 통계자료의 수집 등을 통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소득, 서비스 시설 접근성, 지역사회 역량, 환경과 어메니티 등에 관한 소지역 통계와 기초자료의 축적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강병주,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타당성, 열린충남 제 43호.
- 건설교통부, 2006, 2003 ~ 2005 건설교통백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자료집.
-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200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방안 공청회자료.
- 김선미, 2008,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접목 방안 : 충청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NGO연구 제 6권 제 1호.
- 김선배 외, 2009,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한국산업기술재단.
- 김선기, 2008, 기초생활권의 의의와 개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초생활권TF 발표자료.
- 김영수 외, 2009, 신지역발전정책 구상, 한국산업기술재단.
- 김원배, 2009, 당진-대전, 선천-공주간 고속도륙 개통이후 대전·충남 발전전략과 재발전 심포지엄, 대전발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2008, 농어촌활성화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농어촌지역계획제도의 도입과 정립방향 연구.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9), 지역발전을 위한 행복한 동행 : 지역의 민관 자율형 협력체계 구축 모델과 사례
- 변창흠, 2008, 광역경제권 시대의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지방의 대응전략,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주최, 광역경제권 시대의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충북의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발표문.
- 송미령·김정섭·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8, 시군 기초생활권 정책발전방안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두범, 2007,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현황 및 과제, 열린충남 제 40호.
- 안영진, 2009, 신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의의와 초광역개발권의 위상, 대한지리학회.
- 이관률, 2009, 포괄보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의 대응전략 모색,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워크샵 발표자료.
- 이동우, 2006, 국토의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정책과제, 도시문제, 제41권 제455호.
- 이동필, 2008, 기초생활권의 개념과 발전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초생활권TF 발표자료.
- 이원섭, 2008, 광역경제권 구축 방향과 과제, 지역경제.
- 정성훈, 2009, 초광역개발권의 개발방향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리방안, 대한지리학회.
- 정연정, 2008, 새정부출범과 충남도의 발전과제, 열린 충남 2008. 4월호.
- 조명래, 2008, “후퇴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위기의 균형발전, 무엇이 문제

- 인가?, 수도권 과밀반대전국연대 등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문.
- 지역발전위원회, 2009, 2008년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자료
- 차미숙 외, 2008,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 2008,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지역발전위원회.
-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9,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충청남도의 대응전략
모색, 충남발전연구원 워크샵 발표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2009,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계획.
- 충청남도, 2008, 충청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안).
- 충청남도 통계자료관, 충청남도 지역소득 주요지표, 2010.3.
-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균형발전 로드맵 수립-신지역발전략 구상, 행정자치부.

제 4 주 제

충남지역의 녹색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권 경 득

(선문대학교 교수)

임 정 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 덕 준

(정부간관계연구소)

충남지역의 녹색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 인식조사를 중심으로2)

권경득(선문대)·임정빈(성결대)·김덕준(정부간관계연구소)

I. 서론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역량과 가용자원의 차이로 인해 지역간 일자리창출 능력 등에 구조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고용정책과 더불어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역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고용정책을 위해서는 지역내 다양한 고용관련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상호 연계·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도입, 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지역고용전략 부재,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미흡, 지역고용사업 중복투자 및 사업간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고용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정책을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태양열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입해 총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일본도 2015년까지 환경관련 시장을 100조엔 규모로 확대하고 해당분야 일자리를 22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는 등 녹색성장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4년간 ‘녹색 뉴딜’ 사업에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의 고용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녹색일자리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녹색산업육성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2) 본 논문은 권경득 외(2009.12)의 「녹색산업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방안」의 일부 내용을 한국공공행정학회의 논문 발표를 위해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임. 발표논문의 준비를 위하여 일부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준 선문대학교 대학원의 손창록(박사과정)과 남현수(박사과정) 선생에게 감사드립니다

II. 녹색산업과 정부정책

1. 녹색산업의 개념과 유형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에서부터 출발한다. 경제와 환경이 상충된다고 하는 환경쿠즈네츠곡선³⁾ 패러다임에서 환경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은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아태 환경개발장관회의(MCED, 2005)의 녹색성장의 이니셔티브, 영국의 녹색일자리 창출전략(2005), 독일의 녹색산업정책(2007)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규정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강조⁴⁾함에 따라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동년 9월 발표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의⁵⁾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에너지, 경제, 기후, 생태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대 및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켜 양질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은 에너지 자원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동일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등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녹색산업의 유형에 대해서 OECD(1999)는 <표 1>과 같이 녹색성장에 포괄되는 산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노동연구원(2009)이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제시한 신성장동력(그린에너지 산업을 포괄)의 산업분류는 <표 2>와 같다.

3) 환경쿠즈네츠곡선은 환경오염과 국민소득간의 관계가 역U자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초기에는 상승하나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4) 현대경제연구원(2008), “녹색성장 산업 육성의 기본과제,” 「한국경제주평」, 통권 324호, 2008.11.26.

5) 국무총리실(200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p.13.

<표 1> 녹색성장에 포괄되는 산업의 범위

구분		내용
친환경 산업	오염관리	대기오염통제, 폐수관리, 고형폐기물,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소음 및 진동저감,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
	청정기술 및 관련제품	청정기술 및 공정, 청정제품
	자원관리	실내공기관리, 물 공급, 자원 재활용,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회수,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 지속가능한 산림, 자연재해 관리, 지속가능한 관광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광의로 청정에너지 산업에 포함가능)		수력,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메스, 바이오연료(에탄올, 바이오디젤),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등 개발 및 생산관련 산업

자료 : OECD(1999)의 구분, 김성재(2006)에서 재인용

<표 2> 한국노동연구원의 신성장동력산업 유형

분야	산업
에너지·환경	무공해석탄에너지, 해양바이오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회수/자원화,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수송시스템	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
New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방송통신융합미디어
바이오	바이오신약/의료기기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 Care, 문화콘텐츠

녹색일자리의 유형은 광범위하여 연구와 개발, 생산품 설계, 생산품 제조, 판매 및 유통, 시설의 설치, 시설의 운전과 보수 관리 등 다양한 기술과 숙련 수준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 녹색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녹색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녹색성장이 추진될 경우 연구개발 분야의 지식집약적인 일자리의 증가가 우선적으로 눈에 띄지만, 기존에 있던 폐기물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단순기능 일자리의 성장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녹색일자리가 오히려 유해한 작업장 환경과 저임금을 제공하는 격차의 확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녹색일자리가 임금의 적정성, 고용 및 산업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녹색일자리의 확대가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와 같은 고학력 사회의 특성상 녹색일자리로 인력의 유입을 유인할 수 없으며, 일자리의 확대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또한, 3D 업종과 같은 환경서비스 분야의 기존 일자리를 ‘녹색화’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한 숙련 향상 필요하다⁶⁾.

6)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European Environmental Policy, 2004

<표 3> 녹색인프라 분야와 일자리

분야	산업	직종
신재생 에너지	풍력	환경공학기사, 철강 근로자, 물방아 설계사, 판금속 기사, 기계 기사, 전기장비조립사, 건설장비운전사, 공업용 트럭운전사, 생산 관리인
	태양광	전기공학기사, 전기기술자, 기계기술자, 용접공, 금속조립인, 전기장비조립사, 설치조무사, 건설관리인
	바이오화학 생물연료	화학공학기사, 화학자, 화학장비운전사, 화학기술자, 혼합기계기사, 농부, 공업용 트럭운전사, 농업 관리자, 농산물 감독관
환경	대기오염	환경공학 기사, 대기환경기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자
	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수집인, 트럭운전사, 유해물질제거기사, 보수 및 수선기사, 환경공학 기사, 중장비 기사
	수처리 및 폐수처리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관리기사, 하수도관 정비 및 관리인, 수처리 공장 및 설비 운영인, 배관공, 수도관 부설공, 환경공학기사
기타	대중교통	토목기사, 선로 설치사, 전기기사, 용접공, 버스 운전사, 교통 감독관, 발송인
	건물개조	전기기사, 난방/냉방기 설치사, 목수, 건설장비운전사, 지붕 관리사, 단열기사, 건물 점검인

자료 : Pollin, Robert(2008),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미국의 녹색정책,” 「국제노동브리프」, p. 24.

충청남도의 전략산업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3차 종합발전계획 수정안(2007. 4)에 의하면 충남의 제조업 분야의 세부 시책으로 4대 전략산업의 육성, 새로운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 수요자중심의 기업지원체제 구축, 생산기반 확대 등을 주요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표 4> 충청남도의 4대 전략산업 및 3차 종합발전계획 수정안(2007. 4)

사업유형	특화분야
전자정보기기산업	디스플레이 및 차세대소자 제조장비
자동차·부품산업	친환경 자동차 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산업	디지털콘텐츠 및 응용솔루션(장비포함)
농축산바이오산업	농축산가공/자원화(생물제제 중심 친환경 바이오 포함)

자료 : 대전지방노동청, 충남 2020 산업인력 수급전망 계획, 2007

충청남도의 중점추진 녹색산업의 범주로는 충청남도의 전략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등과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녹색산업 중 신재생에너지산업, 건설업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표 5>와 같은 녹색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충청남도의 녹색산업 육성분야

구분	내용	
전략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 디스플레이 및 차세대소자 제조장비
	자동차·부품산업	- 친환경 자동차 의장·편의부품 - 그린카
	첨단문화산업	- 디지털콘텐츠 및 응용솔루션(장비포함)
	농축산바이오산업	- 농축산가공/자원화(생물제제 중심 친환경 바이오 포함) - 바이오메스, 바이오연료(에탄올, 바이오디젤)
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 수력, 풍력, 태양광 등 개발 및 생산관련 산업
	건설업	- Eco River 조성(4대강 살리기 등)

2. 녹색산업 관련 정책

1)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의 목적 및 사업분야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은 녹색과 뉴딜을 함께 추진하여 잠재적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서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하여 「녹색뉴딜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부주도의 친환경 사업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추진분야로는 ①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에너지 개발 등 자원절감형 경제 구축 사업, ②녹색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고 사업, ③탄소 저감, 수자원 확보 등 안전 관련 선제적·예방적 사업, ④산업·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표 6> 참조), 9개 핵심사업으로 ①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②녹색 교통망 구축, ③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④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담 건설, ⑤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⑥자원재활용 확대, ⑦산림 바이오메스 이용 활성화, ⑧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사업, ⑨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사업이 있다. 각 핵심사업별로 3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연계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클린코리아, 수변구역 녹색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6> 정부의 녹색산업 분류

구분	내용	
녹색산업 관련 핵심사업(9개)	- 4대강 살리기	- 녹색 숲 가꾸기
	- 녹색교통망 확충	-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 폐기물자원 재활용	- 우수유출시설, 중소담
	-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 Eco River 조성 등
	-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연계사업(27개)	- 재해예방, 훼손산림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바이오메스 에너지화	- 수변지역 녹색화
	-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 그린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 기타

2) 재정투입규모 및 기대효과

재정투입규모를 살펴보면, 투입기간(2009년 ~ 2012년) 동안 총 사업비는 50조 492억원 (국비 37조 5,411억원, 지방비 5조 2,724억원, 민자 7조 2,357억원)이다. 9개 핵심사업에는 약 39조원, 27개 연계사업에는 약 11조원이 소요된다.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총 96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표 7> 참조). 기간별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09년 14만명, 2010년 26만명, 2011년 30만명, 2012년 26만명으로 추정된다. 사업별 일자리 창출 효과는 9개 핵심사업에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27개 연계사업에 27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청년 일자리(15~29세)의 경우, 2009년~2012년 4대강 살리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10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계획된 녹색사업을 통합 및 연계하여 분야별 중복 투자를 방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7> 재정투입규모 및 일자리⁷⁾

핵심사업(9개)	재정소요(억원)			일자리(명)		
	기반영 ('09)	추가소요 (-'12)	계	기반영 ('09)	추가소요 (-'12)	계
합계	43,626	456,866	500,492	93,360	863,060	956,420
4대강 살리기 등	4,881	139,895	144,776	7,000	192,960	199,960
녹색 교통망 확충	18,349	78,187	96,536	25,042	113,025	138,067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250	3,467	3,717	816	2,304	3,120
우수유출시설,중소댐	1,845	7,577	9,422	3,063	13,069	16,132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3,209	17,318	20,527	1,643	12,705	14,348
폐기물자원 재활용	506	8,794	9,300	2,377	13,819	16,196
녹색 숲 가꾸기	3,131	21,043	24,174	22,498	148,204	170,702
그린홈, 그린스쿨사업	-	80,500	80,500	-	133,630	133,630
Eco River 조성 등	52	4,786	4,838	393	10,396	10,789

자료 :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추진방안, 2009.

Ⅲ. 녹색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인식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표본추출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은 지역내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9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총 59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466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78.98%이다. 회수된 설문지 중

7) 3월 8일자로 사업 일부 변경

- 그린홈오피스 구축(핵심) :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중복, 부처 간 협의 후 추진
- 그린포트(GREEN PORT), 경전철 구축 : 연계사업 추가
- 해외물산업 진출, 해수담수화기술개발, 건물녹화사업, 에코로드 조성 : 연계사업 삭제

응답신뢰성이 결여된 1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454부가 통계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항목은 ①정부의 녹색산업육성정책과 관련된 14개 문항, ②녹색산업 일자리 창출 관련 충남의 경쟁력과 관련된 22개 문항, ③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9개 문항, ④취업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 15개 문항, ⑤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8> 참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빈도, 비율)과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설문문항의 구성

구분	설문문항	문항수
정부의 녹색산업육성정책	-정부 추진 녹색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에 따른 충남 일자리 창출 효과 -충남의 녹색산업 관련 기술의 경쟁 비교우위	14개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 관련 충남의 경쟁력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타 지역 비교 -충남의 5년 후 교육훈련 및 일자리 관련 노동시장 여건 -충남 교육기관의 우수인력 양성 경쟁력 -충남 기업체의 인력 확보 어려운 이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반조성 관련 충남 지원수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관련 중요사업	16개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충남 지역고용사업의 문제점 -충남 인적자원 개발사업 중 중요사업 -충남 인적자원 개발사업 중 집중 지원 분야 -충남 고용주체간 협의·연계 기능 강화 사업 -(지역)종합고용지원센터의 가능 강화를 위한 역점 분야 -충남 고용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 -지역중심의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역점사업 -충남 고용·인적자원개발의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 -충남 녹색산업 고용지원을 위한 역점사업	9개
취업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충남 지원수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충남 지원수준 -충남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관련 역점사업 -충남 여성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역점사업 -충남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 역점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파급효과가 큰 사업	15개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4개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9>참조), 성별은 남성이 59.9%, 여성은 40.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이하가 24.9%, 30대 35.0%, 40대 31.2%, 50대 8.2%, 60대이상 0.7%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7.4%, 전문대졸 15.4%, 대학교졸 54.1%, 대학원 이상 13.0%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충남도청)이 7.1%, 공무원(시군)이 12.0%, 공무원(노동부) 3.5%, 학계가 9.1%, 경제관련 단체가 7.3%, 기타 직능단체가 9.5%, 중소기업

공인인 7.1%, 지역주민이 21.5% 등으로 나타났다.

<표 9>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69	59.9	직업	충남도청	32	7.1
	여성	180	40.1		시군	54	12
	Total	449	100		노동부	16	3.5
연령	30대 이하	112	24.9		학계(대학 등)	41	9.1
	30대	157	35		연구기관	8	1.8
	40대	140	31.2		경제관련 단체	33	7.3
	50대	37	8.2		기타 직능단체	43	9.5
	60대 이상	3	0.7		시민단체	2	0.4
	Total	449	100		중소상공인	32	7.1
학력	고졸이하	78	17.4		지역주민	97	21.5
	전문대졸	69	15.4		기타	93	20.6
	대학교졸	242	54.1		Total	451	100
	대학원 이상	58	13				
	Total	447	100				

2. 설문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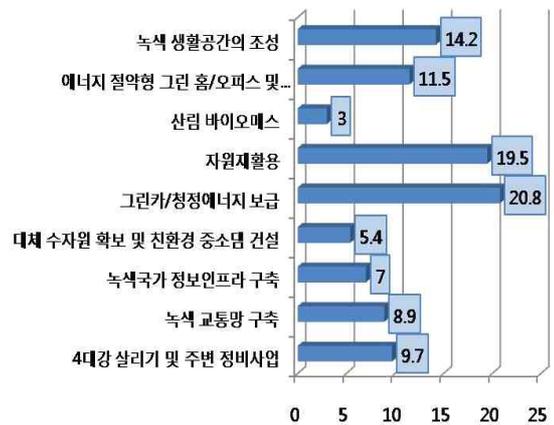
1) 정부의 녹색산업육성정책

(1) 정부 추진 녹색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녹색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에 대해서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이라는 응답이 2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원재활용이 19.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이 14.2%,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은 11.5%,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은 9.7%로 나타나고 있다(<표 10> 참조).

<표 10> 정부 추진 녹색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

구분	빈도	비율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88	9.7
녹색 교통망 구축	81	8.9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64	7.0
대체 수자원 확보/친환경 중소담 건설	49	5.4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189	20.8
자원재활용	177	19.5
산림 바이오매스	27	3.0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104	11.5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129	14.2
Total	9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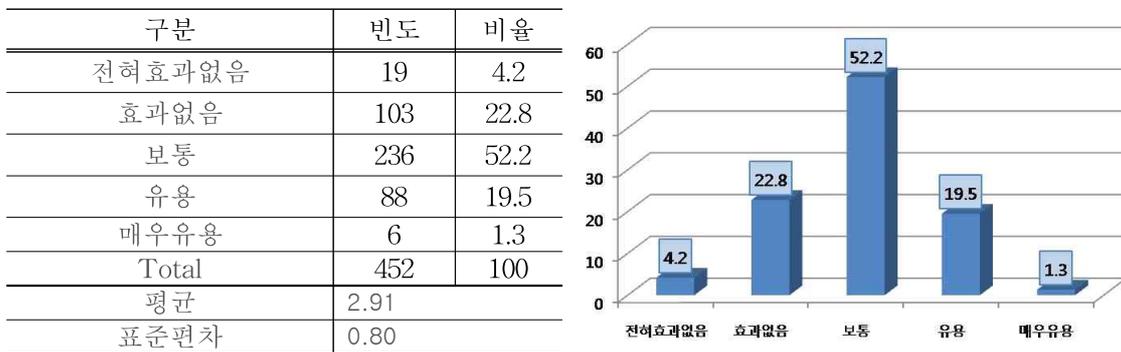


충남의 경우,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그린카분야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에 따른 충남 일자리 창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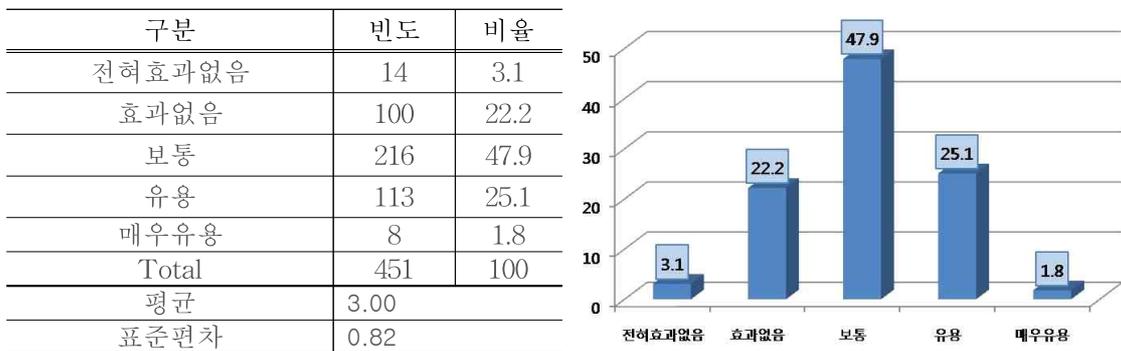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에 따른 충남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하여 원래 계획된 인력고용 외에 인력고용 범주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11> 참조), 유용하였다는 응답은 20.8%,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27.0%로 나타나고 있어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2.91점을 보이고 있음).

<표 3-11> 원래 계획된 인력고용외에 인력고용 범주 확대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에 따른 충남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하여 기술적 숙련도가 높은 인력의 채용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12> 참조), 유용하였다는 응답은 26.9%,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25.3%로 유용하였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3.00점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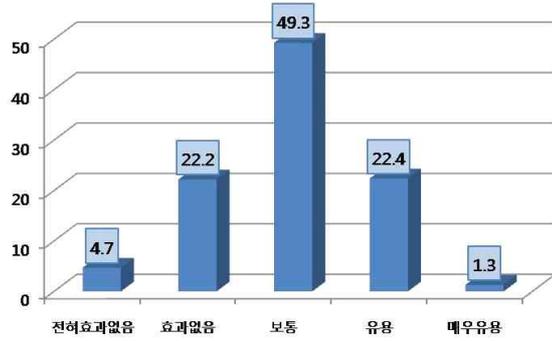
<표 12> 기술적 숙련도가 높은 인력의 채용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에 따른 충남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하여 원래 인력채용목표의 상향 조정하는데 유용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13> 참조), 유용하였다는 응답은 23.7%,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26.9%로 나타났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2.94점을 보이고 있음).

<표 13> 원래 인력채용목표의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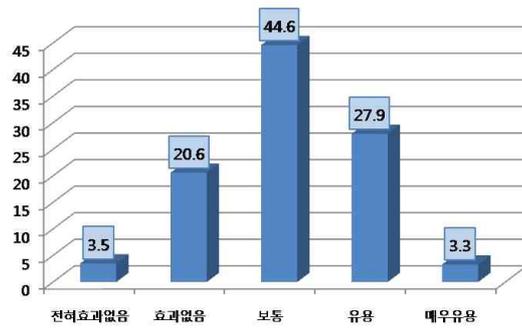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전혀효과없음	21	4.7
효과없음	100	22.2
보통	222	49.3
유용	101	22.4
매우유용	6	1.3
Total	450	100
평균	2.94	
표준편차	0.83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에 따른 충남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하여 우수인력고용을 위한 협력기회 확대에 유용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14> 참조), 31.2%가 유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24.1%로 나타났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3.07점을 보이고 있음).

<표 14> 우수인력고용을 위한 협력기회 확대

구분	빈도	비율
전혀효과없음	16	3.5
효과없음	93	20.6
보통	201	44.6
유용	126	27.9
매우유용	15	3.3
Total	451	100
평균	3.07	
표준편차	0.87	



(3) 충남의 녹색산업 관련 기술의 경쟁 비교우위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등 충남의 녹색산업 관련 기술의 경쟁 비교우위 산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경쟁력인 높은 산업이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으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87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원재활용으로 2.83점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0>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추진 녹색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한 산업은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분야였으나, 충남의 경쟁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으로는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과 자원재활용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 전략산업과 더불어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과 자원재활용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충남의 녹색산업 관련 기술의 경쟁 비교우위

구분	평균	표준편차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2.51	0.82
녹색교통망 구축	2.65	0.84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2.75	0.80
대체 수자원 확보/친환경 주소댐 건설	2.57	0.85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2.63	0.92
자원재활용	2.83	0.86
산림 바이오매스	2.73	0.84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2.65	0.88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2.87	0.92

2)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 관련 충남의 경쟁력

(1)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타 지역 비교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타 지역과 비교하여 교육훈련의 양적수준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응답은 12.1%로 나타났으며, 열악하다는 응답은 31.5%로 나타나고 있어 열악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2.76점을 보이고 있음).

<표 16>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타 지역 비교(교육훈련)

양적 수준			질적 수준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매우열악	23	5.1	매우열악	22	4.9
열악	120	26.4	열악	131	29.1
보통	256	56.4	보통	247	54.9
우수	55	12.1	우수	48	10.7
매우 우수			매우 우수	2	0.4
Total	454	100	Total	450	100
평균	2.76		평균	2.73	
표준편차	0.73		표준편차	0.73	

반면에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타 지역과 비교하여 교육훈련의 양적수준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응답은 11.1%로 나타났으며, 열악하다는 응답은 34.0%로 나타나고 있어 열악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2.73점을 보이고 있음). 설문응답자들은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타 지역과 교육훈련 수준의 비교에 있어서 열악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6> 참조).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타 지역과 비교하여 일자리의 양적수준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응답은 12.6%로 나타났으며, 열악하다는 응답은 31.4%로 나타나고 있어 열악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2.79점을 보이고 있음). 반면에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타 지역과 비교하여 일자리의 양적수준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응답은 8.2%로 나타났으며, 열악하다는 응답은 34.1%로 나타나고 있어 열악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2.73점을 보이고 있음). 설문응답자들은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타 지역과 일자리 수준의 비교에 있어서 열악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표 17>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타 지역 비교(일자리)

양적 수준			질적 수준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매우열악	17	3.8	매우열악	16	3.5
열악	125	27.6	열악	138	30.6
보통	254	56.1	보통	260	57.6
우수	52	11.5	우수	33	7.3
매우 우수	5	1.1	매우 우수	4	0.9
Total	453	100	Total	451	100
평균	2.79		평균	2.71	
표준편차	0.74		표준편차	0.69	

(2) 충남의 5년 후 교육훈련 및 일자리 관련 노동시장 여건

충남의 5년 후 교육훈련 및 일자리 관련 노동시장 여건 중 교육훈련의 양적수준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응답은 25.6%로 나타났으며, 열악하다는 응답은 12.2%로 나타나고 있어 열악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3.14점). 반면에 충남의 5년 후 교육훈련 및 일자리 관련 노동시장 여건 중 교육훈련의 양적수준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응답은 26.8%로 나타났으며, 열악하다는 응답은 12.0%로 나타나고 있어 우수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3.15점을 보이고 있음). 설문응답자들은 향후 5년 후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타 지역과 교육훈련 수준의 비교에 있어서 우수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표 18> 충남의 5년 후 교육훈련 및 일자리 관련 노동시장 여건(교육훈련)

양적 수준			질적 수준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매우열악	8	1.8	매우열악	8	1.8
열악	47	10.4	열악	46	10.2
보통	282	62.3	보통	277	61.3
우수	107	23.6	우수	112	24.8
매우 우수	9	2	매우 우수	9	2
Total	453	100	Total	452	100
평균	3.14		평균	3.15	
표준편차	0.69		표준편차	0.69	

충남의 5년 후 교육훈련 및 일자리 관련 노동시장 여건 중 일자의 양적수준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응답은 25.2%로 나타났으며, 열악하다는 응답은 14.4%로 나타나고 있어 우수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3.10점을 보임). 반면에 충남의 5년 후 교육훈련 및 일자리 관련 노동시장 여건 중 일자의 양적수준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응답은 21.6%로 나타났으며, 열악하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나고 있어 우수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3.04점을 보임). 설문응답자들은 향후 5년 후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타 지역과 일자리 수준의 비교에 있어서 우수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의 양적수준이 질적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일자의 양적인 확대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표 19> 참조).

<표 19> 충남의 5년 후 교육훈련 및 일자리 관련 노동시장 여건(일자리)

양적 수준			질적 수준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매우열악	11	2.4	매우열악	12	2.7
열악	54	12	열악	62	13.8
보통	271	60.4	보통	277	61.8
우수	106	23.6	우수	91	20.3
매우 우수	7	1.6	매우 우수	6	1.3
Total	449	100	Total	448	100
평균	3.10		평균	3.04	
표준편차	0.71		표준편차	0.71	

(3) 충남 교육기관의 우수인력 양성 경쟁력

충청남도 교육훈련기관의 우수인력 양성 경쟁력 중 대학의 경우 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16.0%로 나타났으며,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34.2%로 나타나고 있어 낮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2.77점을 보임).

<표 20> 충남 교육기관의 우수인력 양성 경쟁력

대학			직업훈련기관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매우낮음	27	6	매우낮음	25	5.6
낮음	122	27.2	낮음	105	23.4
보통	227	50.7	보통	256	57.1
높음	70	15.6	높음	60	13.4
매우높음	2	0.4	매우높음	2	0.4
Total	448	100	Total	448	100
평균	2.77		평균	2.80	
표준편차	0.80		표준편차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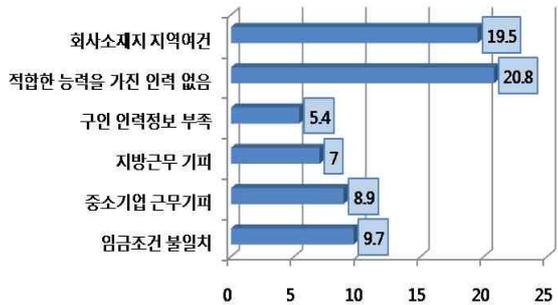
반면에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우수인력 양성 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13.8%로 나타났으며,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32.0%로 나타나고 있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2.80점을 보임). 충남지역의 대학의 우수인력 양성 경쟁력보다 직업훈련기관의 우수인력 양성 경쟁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0> 참조).

(4) 충남 기업체의 인력 확보 어려운 이유

충남 기업체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표 21> 참조), 지방근무 기피가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금조건 불일치가 23.2%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무기피가 2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충남 기업체의 인력 확보 어려운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임금조건 불일치	205	23.2
중소기업 근무기피	182	20.6
지방근무 기피	229	26.0
구인 인력정보 부족	69	7.8
적합한 능력을 가진 인력 없음	78	8.8
회사소재지 지역여건	119	13.5
Total	882	100.0



(5)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반조성 관련 충남 지원수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반조성 관련 충남 지원수준(<표 22> 참조) 중 ①“투자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경우, 만족하다는 응답은 20.4%,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17.7%로 나타나고 있어 만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3.02 점을 보임).

<표 22>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반조성 관련 충남 지원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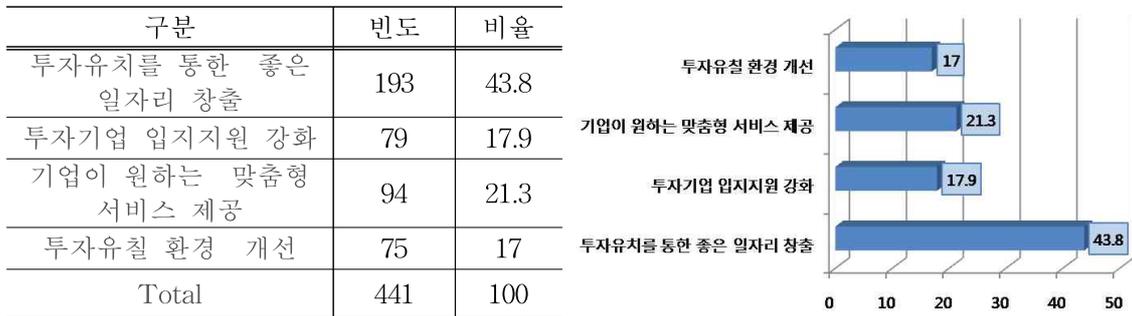
구분	투자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투자기업 입지지원 강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투자유치 환경 개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불만족	7	1.6	10	2.2	15	3.4	7	1.6
불만족	72	16.1	75	16.7	95	21.3	89	20
보통	277	62	242	54	226	50.8	234	52.6
만족	87	19.5	116	25.9	107	24	110	24.7
매우만족	4	0.9	5	1.1	2	0.4	5	1.1
Total	447	100	448	100	445	100	445	100
평균	3.02		3.07		2.97		3.04	
표준편차	0.67		0.75		0.78		0.74	

②“투자기업 입지지원 강화”의 경우, 만족하다는 응답은 27.0%,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18.9%로 만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3.07점을 보임). 또한, ③“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경우, 만족하다는 응답이 24.4%,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24.7%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2.97점을 보임). ④“투자유치 환경 개선”의 경우 만족하다는 응답이 25.8%,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21.6%로 만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5점 척도를 기준으로 3.04점을 보임).

(6)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관련 중요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관련 중요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표 23> 참조), 투자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21.3%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관련 중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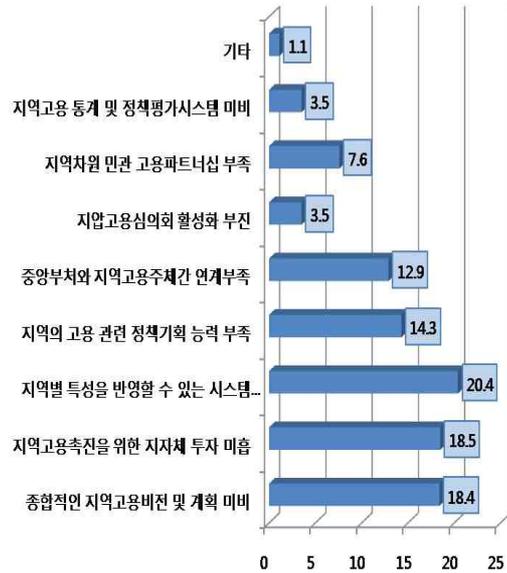
3)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1) 충남 지역고용사업의 문제점

충남 지역고용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표 24> 참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미흡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지자체 투자 미흡이 18.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종합적인 지역고용비전 및 계획 미비가 18.4%로 나타났다. 충남의 지역고용사업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흡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미비와 아울러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지역고용비전 및 계획의 수립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사업추진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지역고용 관련 정책기획 능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력이 미약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표 24> 충남 지역고용사업의 문제점

구분	빈도	비율
종합적인 지역고용비전 및 계획 미비	165	18.4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지자체 투자 미흡	166	18.5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183	20.4
지역 고용 관련 정책기획 능력 부족	128	14.3
중앙부처와 지역고용주체간 연계부족	116	12.9
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부진	31	3.5
지역차원 민관 고용파트너십 부족	68	7.6
지역고용 통계 및 정책평가시스템 미비	31	3.5
기타	10	1.1
Total	8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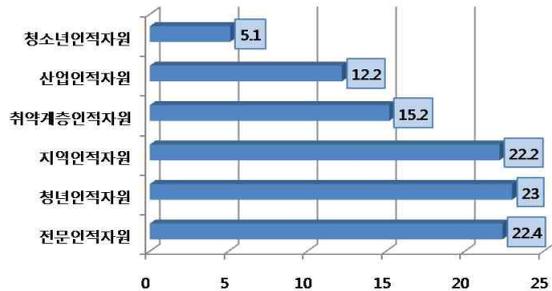


(2) 충남 인적자원 개발사업 중 중요사업

충남 인적자원 개발사업 중 중요사업으로는(<표 25> 참조), 미취업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등과 같은 청년인적자원에 대한 사업이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략인력양성 등 전문인적자원이라는 응답이 22.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충남 인적자원 개발사업 중 중요사업

구분	빈도	비율
전문인적자원	199	22.4
청년인적자원	204	23.0
지역인적자원	197	22.2
취약계층인적자원	135	15.2
산업인적자원	108	12.2
청소년인적자원	45	5.1
Total	8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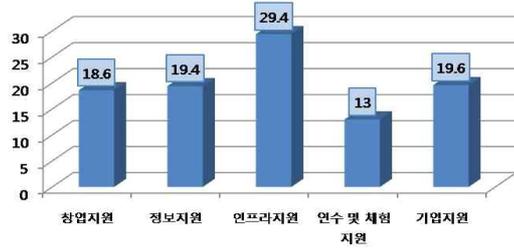


(3) 충남 인적자원 개발사업 중 집중 지원 분야

충남 인적자원 개발사업 중 집중 지원 분야로는(<표 26> 참조),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각종 센터 운영 등과 같은 인프라지원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용확대 유도 등과 같은 기업지원으로 19.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설명회 및 취업 정보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정보지원으로 19.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6> 충남 인적자원 개발사업 중 집중 지원 분야

구분	빈도	비율
창업지원	167	18.6
정보지원	174	19.4
인프라지원	264	29.4
연수 및 체험 지원	117	13.0
기업지원	176	19.6
Total	8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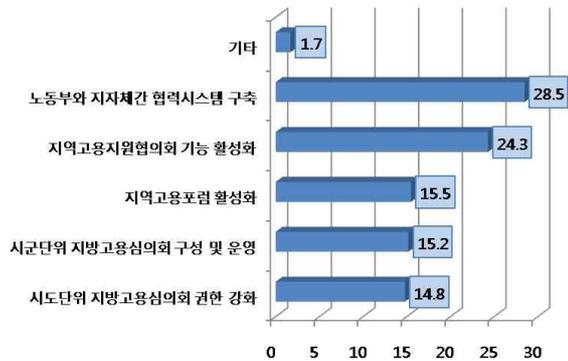


(4) 충남 고용주체간 협의·연계 기능 강화 사업

충남 고용주체간 협의·연계 기능 강화 사업의 경우(<표 27> 참조),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한 사업은 노동부와 지자체간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28.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고용지원협의회 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24.3%를 차지하였으며, 지역고용포럼 활성화는 15.5%, 시군단위 지방고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은 15.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7> 충남 고용주체간 협의·연계 기능 강화 사업

구분	빈도	비율
시도단위 지방고용심의회 권한 강화	132	14.8
시군단위 지방고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136	15.2
지역고용포럼 활성화	139	15.5
지역고용지원협의회 기능 활성화	217	24.3
노동부와 지자체간 협력시스템 구축	255	28.5
기타	15	1.7
Total	8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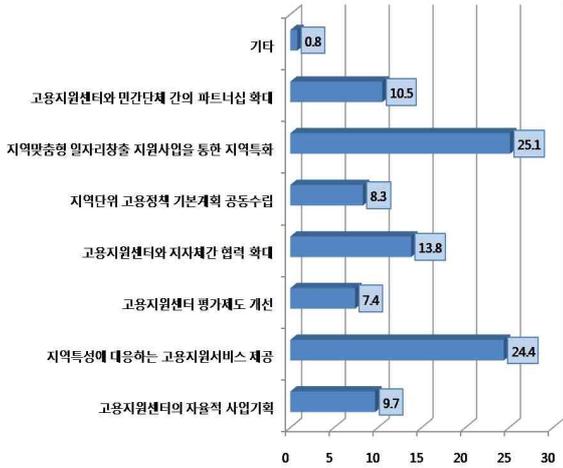


(5) (지역)종합고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역점 분야

(지역)종합고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역점 분야로는(<표 28> 참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특화사업이 25.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역특성에 대응하는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지자체간 협력 확대사업은 13.8%를 차지하였으며, 고용지원센터와 민간단체간 파트너십 확대사업은 10.5%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정책·기획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표 28> (지역)종합고용지원센터의 가능 강화를 위한 역점 분야

구분	빈도	비율
고용지원센터의 자율적 사업기획	87	9.7
지역특성에 대응하는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219	24.4
고용지원센터 평가제도 개선	66	7.4
고용지원센터와 지자체간 협력 확대	124	13.8
지역단위 고용정책 기본계획 공동수립	74	8.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통한 지역특화	225	25.1
고용지원센터와 민간단체간 파트너십 확대	94	10.5
기타	7	0.8
Total	8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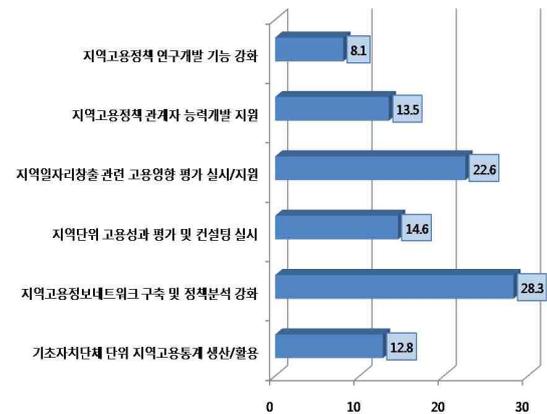


(6) 충남 고용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

충남 고용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으로는(<표 29> 참조),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분석 강화사업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일자리창출 관련 고용영향 평가 실시/지원사업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9> 충남 고용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

구분	빈도	비율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고용통계 생산/활용	114	12.8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분석 강화	251	28.3
지역단위 고용성과 평가 및 컨설팅 실시	130	14.6
지역일자리창출 관련 고용영향 평가 실시/지원	201	22.6
지역고용정책 관계자 능력개발 지원	120	13.5
지역고용정책 연구개발 기능 강화	72	8.1
Total	8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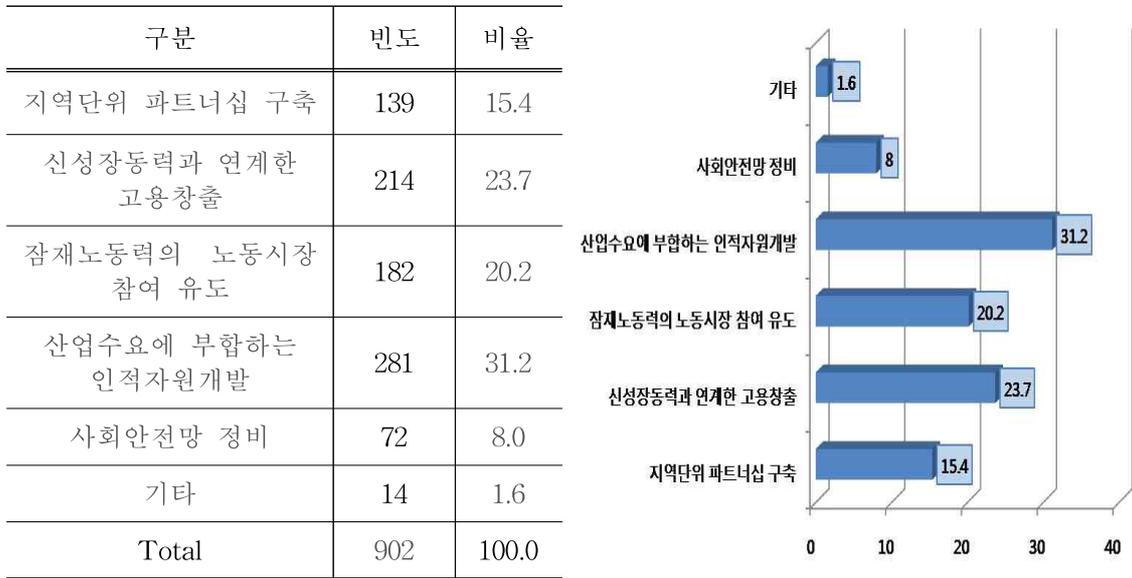


또한, 지역단위 고용성과 평가 및 컨설팅 사업은 14.6%를 차지하였으며, 지역고용정책 관계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은 13.5%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의 고용정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분석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7) 지역중심의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역점사업

지역중심의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역점사업 중(<표 30> 참조),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개발로 31.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고용창출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잠재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는 20.2%, 지역단위 파트너십 구축은 15.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중심의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수요와 연계한 인적자원개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고용창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표 30> 지역중심의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역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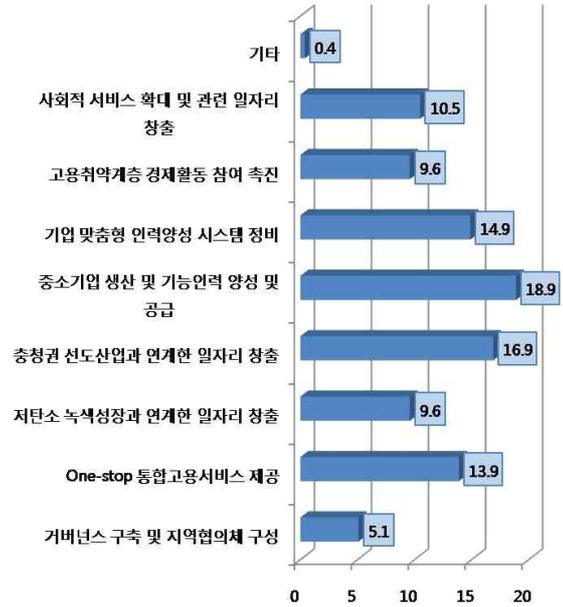


(8) 충남 고용·인적자원개발의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

충남 고용·인적자원개발의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는(<표 31> 참조), 중소기업 생산 및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이 18.9%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이 16.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 정비가 14.9%, One-stop 통합고용서비스 제공이 13.9%, 사회적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이 10.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 고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생산 및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이 중요하며, 이러한 생산 및 기능인력은 충청권의 선도산업과 연계될 수 있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 31> 충남 고용·인적자원개발의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

구분	빈도	비율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협의체 구성	46	5.1
One-stop 통합고용서비스 제공	126	13.9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87	9.6
충청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153	16.9
중소기업 생산 및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	171	18.9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 정비	135	14.9
고용취약계층 경제활동 참여 촉진	87	9.6
사회적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일자리 창출	95	10.5
기타	4	0.4
Total	9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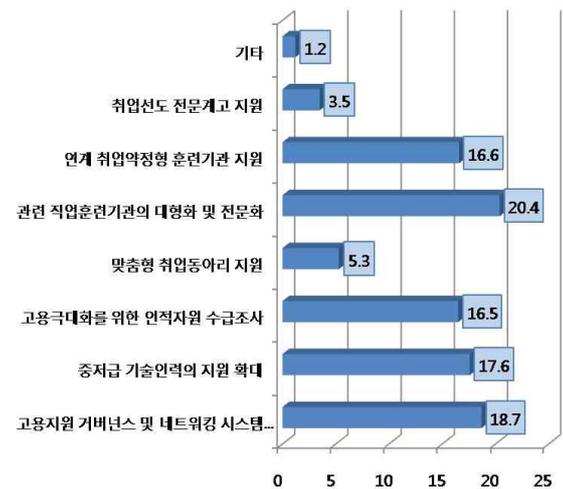


(9) 충남 녹색산업 고용지원을 위한 역점사업

충남 녹색산업 고용지원을 위한 역점사업으로는(<표 32> 참조), 관련 직업훈련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2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용지원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18.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저급 기술인력의 지원 확대가 17.6%, 연계 취업약정형 훈련기관 지원이 16.6%, 고용극대화를 위한 인적자원 수급조사가 16.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 충남 녹색산업 고용지원을 위한 역점사업

구분	빈도	비율
고용지원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169	18.7
중저급 기술인력 지원확대	159	17.6
고용극대화를 위한 인적자원 수급조사	149	16.5
맞춤형 취업동아리 지원	48	5.3
관련 직업훈련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	184	20.4
연계 취업약정형 훈련기관 지원	150	16.6
취업선도 전문계고 지원	32	3.5
기타	11	1.2
Total	902	100.0



충남은 녹색산업 고용지원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이끌기 위한 정비가 필요하며, 고용지원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시스템 정비를 통해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취업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

(1)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표 33> 참조), 수요자 중심 인력양성사업이 31.0%로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1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은 18.5%, 고용촉진훈련은 18.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충남 지원수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충남 지원수준을 살펴보면(<표 34> 참조), ①수요자 중심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만족수준이 6.0%, 불만족 수준이 32.3%로 나타났으며(5점 척도기준으로 2.71점을 보임), ②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는 만족이 9.1%, 불만족이 36.8%(5점 척도기준으로 2.68점을 보임), ③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은 만족이 14.2%, 불만족이 31.3%(5점 척도기준으로 2.78점을 보임), ④고용촉진훈련은 만족이 10.4%, 불만족이 29.4%(5점 척도기준으로 2.77점을 보임), ⑤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만족이 11.9%, 불만족이 37.4%로 나타났다(5점 척도기준으로 2.71점을 보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 만족수준이 높은 사업은 ‘고용촉진훈련’(2.78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2.77점)으로 나타났다.

<표 3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충남 지원수준

구분	수요자 중심 인력양성사업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고용촉진훈 련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불만족	16	3.5	21	4.7	24	5.3	20	4.4	25	5.5
불만족	130	28.8	144	32.1	117	26	113	25	144	31.9
보통	278	61.6	243	54.1	245	54.4	272	60.2	228	50.6
만족	22	4.9	39	8.7	63	14	47	10.4	52	11.5
매우만족	5	1.1	2	0.4	1	0.2	-	-	2	0.4
Total	451	100	449	100	450	100	452	100	451	100
평균	2.71		2.68		2.78		2.77		2.69	
표준편차	0.66		0.72		0.76		0.69		0.76	

(3)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충남 지원수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충남 지원수준을 살펴보면(<표 35> 참조), 공공근로사업은 만족이 15.3%, 불만족이 27.6%(5점 척도기준 2.87점), 노인 일자리 창출은 만족이 13.2%, 불만족이 38.5%(5점 척도기준 2.70점), 장애인 일자리창출은 만족이 7.3%, 불만족이 46.2%(5점 척도기준 2.54점), 여성 일자리창출은 만족이 12.4%, 불만족이 36.6%(5점 척도기준 2.71점),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은 만족이 10.5%, 불만족이 42.6%(5점 척도기준 2.62점)로 나타났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충남 지원수준은 ‘장애인 일자리창출’(2.54점)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2.87점)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충남지원 수준

구분	공공근로 사업 추진		노인 일자리창출		장애인일자 리창출		여성 일자리창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불만족	9	2	22	4.9	33	7.4	24	5.4	30	6.7
불만족	115	25.6	150	33.6	174	38.8	139	31.2	161	35.9
보통	257	57.1	216	48.3	208	46.4	228	51.1	210	46.9
만족	65	14.4	57	12.8	32	7.1	52	11.7	44	9.8
매우만족	4	0.9	2	0.4	1	0.2	3	0.7	3	0.7
Total	450	100	447	100	448	100	446	100	448	100
평균	2.87		2.70		2.54		2.71		2.62	
표준편차	0.71		0.77		0.74		0.77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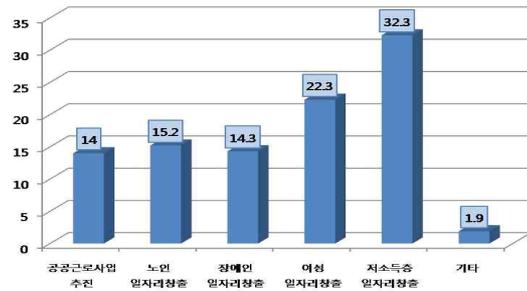
(4) 충남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관련 역점사업

충남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관련 역점사업 중(<표 36> 참조),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사업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여성 일자리창출로 22.3%를 차지하였다. 또한, 노인 일자리창출은 15.4%, 장애인 일자리창

출은 1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근로사업은 1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남 지원수준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설문응답자들은 역점사업에서는 가장 후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표 36> 충남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관련 역점사업

구분	빈도	비율
공공근로사업 추진	127	14.0
노인 일자리창출	137	15.2
장애인 일자리창출	129	14.3
여성 일자리창출	202	22.3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292	32.3
기타	17	1.9
Total	9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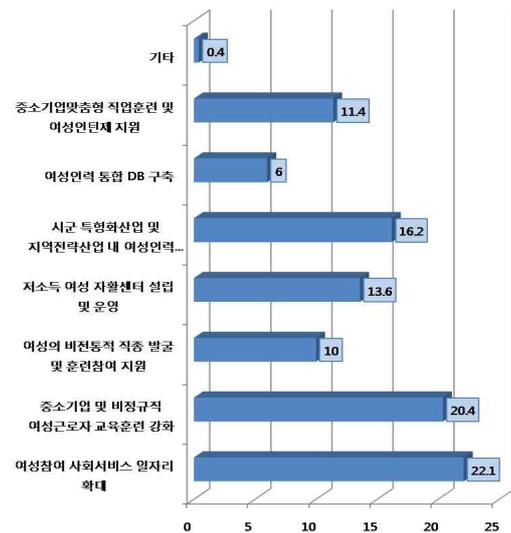


(5) 충남 여성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역점사업

충남 여성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역점사업으로는(<표 37> 참조), 여성참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2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교육훈련 강화로 20.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군 특성화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내 여성인력 개발은 16.2%, 저소득 여성 자활센터 설립 및 운영은 13.6%, 중소기업맞춤형 직업훈련 및 여성인턴제 지원은 1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 충남 여성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역점사업

구분	빈도	비율
여성참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200	22.1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184	20.4
여성의 비전통적 직종 발굴 및 훈련참여 지원	90	10.0
저소득 여성 자활센터 설립 및 운영	123	13.6
시군 특성화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내 여성인력 개발	146	16.2
여성인력 통합 DB 구축	54	6.0
중소기업맞춤형 직업훈련 및 여성인턴제 지원	103	11.4
기타	4	0.4
Total	9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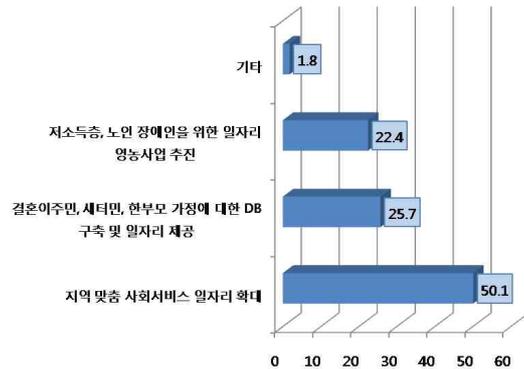


(6) 충남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 역점사업

충남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 역점사업 중(<표 38> 참조),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50.1%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주민, 새터민, 한부모 가정에 대한 DB 구축 및 일자리 제공이 25.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충남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 역점사업

구분	빈도	비율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226	50.1
결혼이주민, 새터민, 한부모 가정에 대한 DB 구축 및 일자리 제공	116	25.7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영농사업 추진	101	22.4
기타	8	1.8
Total	45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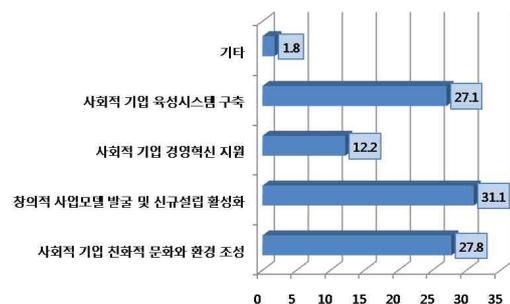


(7)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파급효과가 큰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는(<표 39> 참조),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가 3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이 27.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시스템 구축이 27.1%, 사회적 기업 경영혁신 지원이 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파급효과가 큰 사업

구분	빈도	비율
사회적 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125	27.8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140	31.1
사회적 기업 경영혁신 지원	55	12.2
사회적 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122	27.1
기타	8	1.8
Total	450	100



IV. 결론

본 연구는 지역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의 고용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

다. 현재 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도입, 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지역고용전략 부재,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미흡, 지역고용사업 중복투자 및 사업간 연계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녹색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은 ①기술진보와 신성장산업의 형성을 통해 녹색일 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②기존 산업에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수요확대에 따른 녹색일 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③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방안 등 크게 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녹색산업 관련 지역고용정책의 문제점으로는 ①종합적인 지역고용비전 및 계획 미비, ②지역 고용촉진을 위한 지자체 투자 미흡, ③지역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④중앙부처와 지역고용주체간 연계부족, ⑤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 부진, ⑥지역차원의 민관 고용파트너십 및 네트워킹 미흡, ⑦지역의 정책기획 능력 및 전문성 부족, ⑧지역고용 통계 및 정책평가시스템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으로는 ①청년인턴제 문제, ②일회성 일자리 창출의 문제, ③고급 인력의 역외유출, ④취약계층(저소득 층, 여성, 장애인, 고령자)의 고용지원 사업의 부진, ⑤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 ⑥인력, 예산, 제도적 한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역할 미비, ⑦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홍보와 운영에 대한 홍보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녹색산업 육성에 따른 충청남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태양광 풍력발전설비,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녹색산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한 생산, 기계, 전기, 전자 관련 직의 일자리 창출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중소 벤처 기업에서 정부의 R&D 과제를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업지역이 많은 만큼 아산만 지역이나,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당, 청소년 수련원 등을 녹색관광 벨트화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충남지역 녹색일 자리의 개괄적 추진전략은 <부록 표 1> 참조).

앞으로 충청남도는 지역구성원의 녹색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요구를 반영하여, 충남의 녹색산업육성을 “살아숨쉬는 녹색경제 Green Province 충남”이라는 충남 녹색일 자리 창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목표로 ①충남의 녹색산업육성을 위한 안정적 정책 구조, 가격 및 인센티브를 통한 녹색시장 창출, ②녹색일 자리에 대한 투자 및 재정 지원 확대, ③노·사·민·정간의 사회적 연계(social network) 강화, ④충남지역의 녹색경제에 대한 제약요인으로서 부족한 기술력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⑤녹색일 자리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남도가 녹색일 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시·군, 노동계, 산업계, 시민들의 노력 및 참여가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 경인지방노동청, 인천지역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200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전략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2009.3.10-11.
- 광주광역시·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광주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8.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008.
- 국회예산정책처,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2009.
- _____, 기본계획수립 및 종합평가, 2008.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Global HR Forum, 2009.11.3-11.5.
-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추진방안, 2009.
- 김승택, '녹색일자리(Green Job)의 정의와 창출방안, 2008.
- _____, '녹색성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 2008.
- _____,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 <녹색성장과 국가성장전략의 모색>, KD I·미래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세미나, 2008. 11. 13.
- _____, "녹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녹색일자리의 이해, 일자리 창출 및 정책과제,"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전략의 모색 토론회, 2009.
- 김주섭, "지역고용개발 촉진을 위한 법제화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 노동부, '08년도 인력수요동향조사, 2008.
- _____, 2009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방향, 2009.
- _____, 2009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2008.
- _____,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2008.
- _____,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2003.
- _____, 인력수요동향조사, 2008.
- _____, 지방자치단체 취업실태 조사, 2006.
- _____,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및 일자리 창출 시책 평가와 모델개발, 2008.
- _____, 지역고용 활성화 기본계획(안), 2008.
- _____, 지역고용정책 담당자 워크숍 자료집, 2009.
- _____, 지역별임금근로시간조사, 2008.
- 노동부·지역고용학회, 2009년 지역고용정책 아카데미 워크숍 자료, 2009.7.9-10.
- 노동부·청안고용지원센터, 청년층 고용지원협의회 회의자료, 2008.12.11.
- 대전지방노동청,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2008.
- _____, 충남 2020 산업인력 수급전망 계획, 2007.
- _____, 충남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 _____, 충남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평가, 2008.

- _____, 충남지역 전략산업 인력수요 및 인적자원개발 연구, 2005.
- _____, 충북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평가 및 기본계획, 2008.
- _____, 충청남도 '08년도 일자리창출 계획, 2008.
- _____, 충청지역 재직자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2005.
- 대전지방노동청·충남벤처협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9년 1차 충남고용포럼 자료집, 2009.6.29.
- _____,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9년 2차 충남고용포럼 자료집, 2009.9.10.
- 산림청, 녹색일자리 사업의 2009상반기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09.7
- _____, 고용창출! 숲에서 답을 찾다, 2009 상반기 녹색일자리 성과자료집, 2009.6
- 산업연구원, 사회서비스산업 고용유발, 2008.
- _____,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2004.
- 산업자원부, 새로운 직업군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 방안, 2007.
- 삼성경제연구소,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CEO Information 제691호, 2009.
- _____,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이슈페이퍼, 2009.
- _____,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CEO Information, 제691호, 2009.
- 유길상, “일본 고용정책 추진체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2009.
- 유종상, “일자리 창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 Letter 2009년 1호.
- 이종호, 충청북도의 녹색성장전략, 충북경제, 2008.
- 이창훈, “선진국의 녹색성장,” 녹색성장포럼, 2008.9.9.
- 이혜경,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 2009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9.12.11-12.
- 임상훈, 고용-인적자원개발 현황과 문제점, 2007.
- 주일본대사관, 일본의 지역고용대책 현황, 2008.
- 지역고용정책협의회, 2008년 4/4분기 회의 자료, 2008.
- _____, 2009 1/4분기 회의자료, 2009.
- 충남발전연구원, 전략산업별 인적자원의 효율적 수급방안, 2008
- _____, 전략산업별 인적자원의 효율적 수급방안, 2008.
- _____, 충청남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2009.
- 충남발전연구원·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협회, 차세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2009.10.21-22.
-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제3회: JOB아라! 포럼(산·학·관 HR 전문가 포럼), 2009.12.16.
- 채창균, 일자리 창출의 뉴패러다임, 일자리 선진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일자리 선진화 전략, 2008.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결과, 2008.5.
- 한국고용정보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2007,

- _____,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차별성 연구, 2008, p.47.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2009.
- _____,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 2009.
- _____, 산업정책의 일자리창출 효과 분석, 2007.
- _____, 일자리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2007.
- _____, 지역고용정책 실태조사, 2008.
- _____,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2007.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e-HRD 12-10호, 2009.7.24.
- 한국행정연구원, “일자리 창출과 경제안정,” 행정포커스, 80(2): 8-22, 2009년 3-4월호.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정책사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정보 167호, 2009.3.25.
- 현대경제연구원, “녹색성장 산업 육성의 기본과제,” 한국경제주평, 통권324호, 2008.11.26.
- _____, 녹색성장산업 육성의 기본과제, 한국경제주평, 통권324호, 2008.
- 홍양희, “녹색성장전략이 충북산업의 성장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충북경제, 2008.
- 환경부,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 후속조치 수립, 2006.
- _____,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 2009.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YESFEZ 맞춤형 인력공급방안 2009 관련기관 Workshop 자료, 2009.12.16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European Environmental Policy, 2004
- OECD, Environment and Employment: An Assessment, 2004.
- Pollin, Robert,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미국의 녹색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08.
- Pollin, Robert,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의 녹색정책, 2008.
- UNEP, Press Releases, 2008.12.22.

<부록 표 1> 충남지역 녹색일자리 추진 전략-제도 및 재정

◎ 주체, ○ 보완, ▲ 보조, △ 참여

구분	국가		충남		시·군		노동계		산업체		훈련기관 (대학 등)		기타(시민)	
	제도	예산	제도	예산	제도	예산	제도	예산	제도	예산	제도	예산	제도	예산
기술진보에 따른 녹색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및 녹색선도기업 선정·육성	○	◎	◎	◎	△	△	-	-	▲	▲	-	-	-	-
신 수요창출을 위한 중앙정부 연계사업	◎	◎	◎	○	△	△	-	-	△	△	△	-	△	-
의약바이오 분야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	○	◎	◎	△	△	-	-	▲	▲	▲	-	-	-
NEW IT 분야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	○	◎	◎	△	△	-	-	▲	▲	▲	-	-	-
에너지 분야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	○	◎	◎	△	△	-	-	▲	▲	▲	-	-	-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지역내 효율적인 인력양성체제 확립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전담기구 설치·운영	▲	▲	◎	◎	○	○	○	-	○	△	○	-	△	-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통합·조정 거버넌스 구축	○	▲	◎	◎	○	○	◎	-	◎	▲	◎	-	◎	-
업종별 인력네트워크 구축·운영	▲	○	◎	◎	○	○	△	-	◎	○	○	-	○	-
노사분쟁 조정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노사민정 협력모델 구축	◎	○	◎	◎	△	▲	◎	-	◎	-	-	-	◎	-
기존산업의 녹색산업 전환에 따른 녹색일자리 창출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혁신	◎	○	◎	◎	○	△	○	-	◎	▲	○	-	-	-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변환	◎	◎	◎	◎	○	△	-	-	◎	▲	○	-	-	-
가치사슬의 녹색변환	▲	○	◎	◎	△	△	-	-	◎	▲	○	-	-	-
사회적 기업육성 및 사회적 서비스 수요 창출	○	◎	◎	◎	○	○	△	-	○	○	○	-	-	-
물류산업 중심지로 육성	○	◎	◎	◎	○	○	-	-	◎	▲	-	-	-	-

<표 4-35> 충남지역 녹색일자리 추진 전략-제도 및 재정(계속)

◎ 주체, ○ 보완, ▲ 보조, △ 참여

구분	국가		충남		시·군		노동계		산업체		훈련기관 (대학 등)		기타(시민)	
	제도	예산	제도	예산	제도	예산	제도	예산	제도	예산	제도	예산	제도	예산
지역내 훈련 및 재훈련시스템 구축														
직업훈련 전달체계 조정	▲	▲	◎	◎	◎	○	◎	-	◎	▲	◎	-	△	-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	○	◎	◎	▲	△	◎	-	◎	▲	◎	-	△	-
주부 재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충남지역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모델	▲	▲	◎	◎	▲	▲	△	-	△	△	○	-	△	-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														
청년	▲	◎	◎	○	○	▲	△	-	○	▲	○	-	▲	-
고령자	○	◎	◎	○	▲	▲	△	-	○	▲	○	-	▲	-
여성	○	◎	◎	○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	△	-
공공투자	◎	◎	○	○	○	○	△	-	○	▲	○	-	△	-
충남형 녹색산업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바이오에너지 메카 조성 일자리	○	◎	◎	◎	▲	▲	-	-	◎	◎	△	-	△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ESCO 산업 일자리	○	◎	◎	◎	▲	▲	-	-	○	◎	△	-	△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일자리	◎	◎	○	○	▲	▲	-	-	△	-	△	-	△	-
녹색금융산업 일자리	◎	○	◎	◎	△	△	-	-	◎	▲	-	-	△	-
기타 녹색산업 1차 일자리	▲	▲	◎	◎	◎	◎	▲	-	▲	▲	○	-	△	-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	○	◎	◎	◎	△	△	-	-	▲	△	△	-	△	-